

전략연구 2011 - 05

민선5기 충남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 연구

유 학 열

발 간 사

충남의 농업·농촌은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 고령화 및 정주환경 취약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도시민의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농촌으로의 回歸현상 등 긍정적 의미에서의 농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중앙정부, 충청남도, 시·군 등 정책수립·집행자는 물론 농어민단체(조직), 소비자단체 등 정책수혜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민선 5기 충남 농정을 ① 친환경농업 및 지역식품체계 구축, ② 지속가능한 內發的 농촌 발전, ③ 주요 6대 품목 발전(쌀, 축산, 과수, 원예, 임업, 어업), ④ 농정 거버넌스 발전으로 나누고, 총 10개 세부분야를 설정하여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충남 농업·농촌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충남 농정이 풀어나가야 할 핵심과제 도출 및 세부분야별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실천과제(사업)의 시행계획을 정책수립자, 정책수혜자, 전문가 등 다양한 계획 주체들과의 협력하여 수립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민선 5기 충남 농정의 기본방향, 목표 및 핵심과제들은 충남도가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3농혁신 추진에 있어서 礎石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동안 본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충남도 농수산국 채호규(前 이성호)국장, 윤석규 농정과장 및 현장에서 많은 고견을 주신 농어업인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유학열 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 진 도

연구요약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황 파악, 둘째는 충남 농정의 비전, 목표 및 전략 수립, 셋째는 세부분야별 추진계획이다.

1)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황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황으로 최근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요구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생활공간(삶터), 경제활동 공간(일터), 환경 및 경관 공간(쉼터), 지역의 역량으로 세분화에서 현황을 살펴보았다.

2)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비전, 목표, 전략

비전으로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인간의 공생,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순환,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 도시와 농촌의 공생이 이루어지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및 충남 도농 공동체 형성을 의미한다.

충남 농정의 목표로는 ①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②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③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충남 농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친환경 농어업과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확대하고, 이를 지역순환 식품체계로 뒷받침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안심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부가가치 증대를 실현하는 ①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 농어촌 사회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지역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역 내 자생력을 키우는 ②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의 성공을 위한 ③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 로 설정하였다.

3) 세부분야별 추진계획

전술에서 제시한 충남 농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개 세부분야별 기본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고품질 농업

친환경·고품질 농업분야의 기본 추진전략은, 친환경 고품질 농업 생산기반 확립과 인력양성, 친환경 고품질 생산에 걸맞은 유통시스템 확립과 6차산업화 추진,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기반의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두었다.

실천과제(사업)로서는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기반 구축, 친환경 고품질 농업 인력 양성, 저투입-지역순환형 스마트 농업의 확산 보급, 신선한 제철 과일 채소 소비 증진사업을 제시하였다.

(2) 지역 농식품체계의 구축

지역 농식품체계 구축의 기본 추진전략은,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유통시장 확대,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 시장의 재설정,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충남 농식품체계 구축에 두었다.

실천과제(사업)로서는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바른 식생활을 위한 캠페인 시행을 제시하였다.

(3) 선진 축산업

선진 축산업분야의 기본 추진전략은, 환경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위생·안전 공급기반 구축, 현장중심의 연중상시 방역체계 확립에 두었다.

실천과제(사업)로서는 축산농장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자원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부분육 유통시스템 구축, 가축방역시스템 보완 및 주요 질병 사전예방사업을 제시하였다.

(4) 산림자원 육성 및 활용

산림자원 육성 및 활용분야의 기본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 육성 및 활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의 사회적 기능 증진 및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에 두었다.

실천과제(사업)로서는 임업과 농업정책의 통합적 추진,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와 귀농지원, 권역별로 특성화된 산림휴양단지 조성, 전업인 육성과 산림경영 컨설팅 제도 도입,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육성, 주요 임산물의 시장잠재력 분석 및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5) 청정수산

청정수산분야의 기본 추진전략은 고품질 친환경 품종 육성 및 소득 안정화와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구축에 두었다.

실천과제(사업)로서는 지역명품 수산물 특화지원, 지식·정보화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수산업 육성을 제시하였다.

(6) 살기 좋은 희망 마을만들기

살기 좋은 희망 마을만들기 분야의 기본 추진전략은 사람 및 공동체 중심의 마을만들기 추진, 주민 스스로의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에 의한 마을만들기 추진에 두었다.

실천과제(사업)로서는 마을자원조사 및 마을진단·유형화, 마을만들기 주민 동기부여 및 추진주체의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모델사업의 추진 및 마을만들기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제시하였다.

(7) 농어촌 6차 산업화

농어촌 6차 산업화분야의 기본 추진전략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대응한 6차산업화의 체계적인 지원, 다양한 유형의 농어촌자원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지원, 농어촌 자원 개발 및 산업화를 제대로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두었다.

실천과제(사업)로서는 향토자원 및 향토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향토산업 비즈니스인 큐베이터의 설치, 향토산업육성조례 제정 및 향토산업통합위원회 운영, 향토산업 산업화 기반 확충 및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8)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분야의 기본 추진전략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모색에 두었다.

실천과제(사업)로서는 충남형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운영과 제도 구축 및 정책수단 발굴,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운용을 제시하였다.

(9) 도농교류와 농어촌응원운동

도농교류와 농어촌응원운동 분야의 기본 추진전략은 농촌체험마을의 인적역량강화 및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전 도민과 함께 농어촌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귀농·귀촌인구의 유치에 두었다.

실천과제(사업)로서는 귀농·귀촌 수요예측 및 통계정비, 귀농·귀촌 설명회 및 투어 실시, 귀농 현장 애로지원단 운영, 충남 귀농인 대회 개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범도민운동을 제시하였다.

(10) 지역리더 양성

지역리더 양성분야의 기본 추진전략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용능력 제고, 각 주체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지역리더 육성, 충청남도 독자적 농촌지역리더 육성 프로그램 구축에 두었다.

실천과제(사업)로서는 농촌지역리더 양성, 지역리더 교육이수자 풀(pool) 구축, 농어촌 체험마을 순회교육을 제시하였다.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4
1) 공간적 범위	4
2) 시간적 범위	4
3) 내용적 범위	4
3. 연구의 방법	5
1) 제1단계: 연속 워크숍 개최	5
2) 제2단계 : T/F 구성	6
4. 연구의 흐름	7
제2장 선행연구 검토	8
1. 선행연구 검토	8
1) 2020 충남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2009년 6월)	8
2)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년 6월)	8
3) 민선 5기 충남비전(2010년 12월)	9
4) 본 연구의 특징	9
제3장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황	11
1.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요구 변화	11
2.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실	12
1) 생활공간(삶터)	12
2) 경제활동 공간(일터)	16
3) 환경 및 경관 공간(쉼터)	19
4) 지역의 역량	21
제4장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전략	23
1. 농어촌개발 방식의 전환 요구 및 농어촌의 중요성	23
1) 농어촌개발 방식의 전환 요구	23
2) 농어업·농어촌의 중요성	25

2. 충남 농정의 비전, 목표 및 전략	26
1) 비전	26
2) 목표	26
3) 3대 추진 전략	26
3. 충남 농정의 특징	29

제5장 세부분야별 추진방안 30

1. 친환경·고품질 농업	30
1) 현황 및 문제점	30
2) 기본 추진전략	35
3) 민선 5기 실천과제	36
2.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구축	39
1) 현황 및 문제점	39
2) 기본 추진전략	42
3) 민선 5기 실천과제	43
3. 선진 축산업	45
1) 현황 및 문제점	45
2) 기본 추진전략	49
3) 민선 5기 실천과제	51
4. 산림자원 육성·활용	53
1) 현황 및 문제점	53
2) 기본 추진전략	55
3) 민선 5기 실천과제	56
5. 청정수산	60
1) 현황 및 문제점	60
2) 기본 추진전략	63
3) 민선 5기 실천과제	64
6. 살기 좋은 희망 마을만들기	66
1) 현황 및 문제점	66
2) 기본 추진전략	69
3) 민선 5기 실천과제	72
7. 농어촌 6차 산업화	74
1) 현황 및 문제점	74
2) 기본추진전략	78

3) 민선 5기 실천과제	79
8.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82
1) 현황 및 문제점	82
2) 기본 추진전략	86
3) 민선 5기 실천과제	86
9.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89
1) 현황 및 문제점	89
2) 기본 추진전략	90
3) 민선 5기 실천과제	90
10. 지역리더 양성	93
1) 현황 및 문제점	93
2) 기본 추진전략	94
3) 민선 5기 실천과제	94
참고 문헌	97

표 목 차

<표 2-1>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비교	10
<표 3-1>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시·군별 현황	13
<표 3-2> 각급 학교 통폐합 실태	14
<표 3-3> 향토산업 육성 지원금액 및 주요 참여기업체 매출현황	17
<표 3-4>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구축 실태 및 방문객 수	19
<표 3-5> 농업가구 및 인구변화 추이	21
<표 5-1>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30
<표 5-2> 충남의 작물유형별 재배면적(2004년, 2008년) (이준우, 2011)	32
<표 5-3> 충남의 쌀 가공 및 저장능력 (이준우, 2011)	32
<표 5-4> 충남의 원예작물 생산 현황	33
<표 5-5> 과일 품목별 생산액과 충남 비중(2009년)	34
<표 5-6>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전송된	40
<표 5-7> 충남의 축종별 호당 사육두수 변화	45
<표 5-8> 축종별 전업농 현황(' 90→' 09, 충남)	46
<표 5-9> 기존 정책(사업) 분야별 예산배분 현황	48
<표 5-10> 충남 임목지의 산림생산구조	53
<표 5-11> 시·군의 생산품목 내용	54
<표 5-12> 어업가구 및 인구변화 추이	60
<표 5-13> 마을만들기의 영역 및 기능	69
<표 5-14> 마을만들기의 추진전략	70
<표 5-15> 충남의 향토산업 및 지역연고산업 추진현황 1	75
<표 5-16> 충남의 향토산업 및 지역연고산업 추진현황 2	76
<표 5-17> 기초생활권 시·군의 공공서비스 부문별 공급지수(2005년 기준)	83
<표 5-18>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공공서비스 부문별 공급지수(2005년 기준)	84
<표 5-19> 농어촌 시·군의 서비스기준 항목별 이행실태	85

그림 목차

<그림 1-1> T/F 활동 내용	6
<그림 1-2> 연구의 흐름	7
<그림 4-1> 충남 농정의 비전, 목표 및 전략	28
<그림 5-1> 충남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추세(2001~2010)	31
<그림 5-2> 충남의 원예작물 재배면적 비중(전국 대비)	34
<그림 5-3>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스템	39
<그림 5-4> 축산업의 경쟁력 구성요소	49
<그림 5-5> 충청남도 수산물생산량 비중	61
<그림 5-6> 종류별 충청남도 수산물생산량 비중	62
<그림 5-7> 마을만들기의 기본방향	69
<그림 5-8> 마을만들기 추진 모형	71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충남의 농업·농촌은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 고령화 및 정주환경 취약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도시민의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농촌으로의 回歸현상 등 긍정적 의미에서의 농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듯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는 중앙정부, 충청남도, 시·군 등 정책수립·집행자는 물론 농어민단체(조직), 소비자단체 등 정책수혜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농업·농촌 문제는 매우 다양한 품목과 분야로 되어 있기에 하나의 큰 틀에서 풀기보다는 품목별, 분야별 세부주제를 설정 각각의 작은 틀에서 서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민선 5기 충남 농정의 4대 핵심 부문¹⁾을 ① 친환경농업 및 지역식품체계 구축, ② 지속가능한 內發的 농촌 발전, ③ 주요 6대 품목 발전(쌀, 축산, 과수, 원예, 임업, 어업), ④ 농정 거버넌스 발전으로 나누고, 총 10개 세부분야²⁾를 설정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충남 농업·농촌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충남 농정이 풀어나가야 할 핵심과제 도출 및 세부분야별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선 5기 내 실행 가능한 실천과제(사업)의 시행계획을 정책수립자, 정책수혜자, 전문가 등 다양한 계획 주체들과

1)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 및 충남발전연구원이 협의를 통해 도출한 부문임

2) 충남 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충남 농정혁신 T/F팀이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11개 세부분야가 결정됨. 본 연구에서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제외한 10개 세부분야를 다루고자 함. 참고로 11개 세부 분야는 다음과 같음. 친환경·고품질 농업, 선진 축산업, 산림자원 육성·활용, 청정 수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농어업 6차산업화,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지역리더 양성, 민관협력 체계 구축임

의 협력하여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충남 농정이 나아갈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실천과제(사업)를 부문별로 제시함에 있다.

연구 목적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충남 농업·농촌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2) 충남 농정이 나아갈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 3)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실현가능한 실천과제(사업) 제시

【참조: 계획수립 경위】

일 정	내 용
11년 1월 초순	충남 농정혁신 실천과제 시행계획 수립 지시(도지사)
11년 1월 중순	실천과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속워크숍 기획 (충발연+충남도)
11년 1월 27일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농정혁신위원회 구성, 연속워크숍 충발연과 공동주최·주관 합의
11년 1월 31일	농정혁신위원회 개최(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로 변경)
11년 1월 31일	충발연 전략연구과제로 선정 (충발연+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충남도 농수산국 협동 연구)
11년 2월 9일	도지사와의 간담회, 연속워크숍 세부주제 선정 및 관련 농어민 단체의 의견 수렴
11년 2월 10일~4월 14일	‘민선 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속 워크숍’ 제1회~제6회 개최
11년 4월 22일	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 개최(대토론회 준비 상황 점검)
11년 4월 22일	도지사 보고
11년 4월 26일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 개최
11년 5월 16일	농어업·농어촌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T/F 구성
11년 5월 17일~6월 10일	17개 분야 T/F 팀 자율적 활동
11년 6월 22일	도지사 보고(진행상황 중간 점검)
11년 6월 29일~7월 1일	농정혁신 T/F 재구성(17개 T/F → 10개 T/F)
11년 7월 4일~7월 20일	10개 분야 T/F 팀 자율적 활동
11년 8월 22일	의회보고(농수산경제위원회)
11년 8월 30일	민선5기 충남 농정혁신(3농혁신) 보고회

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함
 - 농어촌 읍·면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은 2011년~2014년(4개년)

3) 내용적 범위

-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황 및 문제점
-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전략
- 10개 세부 분야의 추진계획

3. 연구의 방법

1) 제1단계: 연속 워크숍 개최³⁾

- 다양한 주체들의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문별 워크숍 개최
- 17개 세부분야로 나누어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형식으로 진행
- 실시 기간: 2011년 2월 10일 ~ 4월 14일(延 6회 개최), 4월 26일 대토론회

【참조: 연속 워크숍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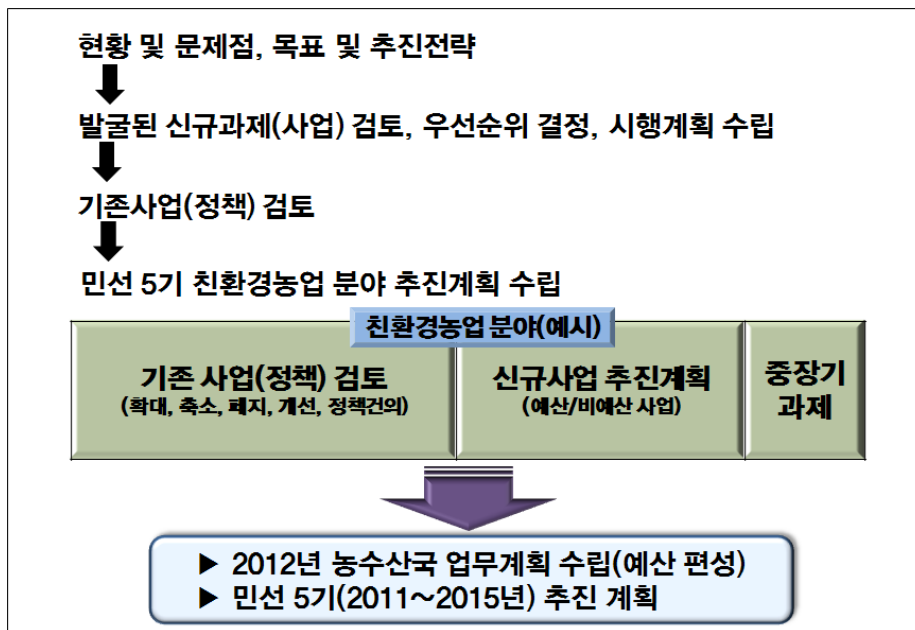
일정	시간	주제
제1회 (2월10일)	10:00~12:30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14:00~16:30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제2회 (2월24일)	10:00~12:30	지역리더 양성
	14:00~16:30	도농상생·교류
제3회 (3월10일)	10:00~12:30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14:00~16:30	임업 발전 방안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제4회 (3월24일)	10:00~12:30	과수
		원예(특작)
	14:00~16:30	어업
		친환경농업
제5회 (4월7일)	10:00~12:30	농정거버넌스
		농업보조금
	14:00~16:30	지역농협
		향토산업 발전
제6회 (4월14일)	10:00~12:30	쌀
	14:00~16:30	축산
대토론회 (4월26일)	14:00~18:00	민선5기 충남 농정 대토론회

3) 연속 워크숍 및 대토론회는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가 주관함

2) 제2단계 : T/F 구성

○ 세부분야별 T/F 구성 · 운영

- 운영 기간: 2011년 5월 ~ 8월
- 구성: 담당공무원, 농어민단체(농어업인), 전문가, 충청연 연구진
- T/F 별 10~15명으로 구성
- 신규과제(사업) 및 기존사업(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 분야별 실천과제 확정
-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그림 1-1> T/F 활동 내용

4. 연구의 흐름



<그림 1-2> 연구의 흐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1) 2020 충남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2009년 6월)

본 계획은 충남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중·장기 발전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분산된 농어업·농어촌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개년 중장기 계획이며, 도내 16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 종합계획으로서 농어촌지역을 주된 계획의 공간으로 하고 있다.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대응과제 제시, 부문별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출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시책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별(10개 과제)⁴⁾ 단위사업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하였다.

2)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0년 6월)

본 계획의 목적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간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부문별 시행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수립 지침을 수용하면서, 충남의 여건과 특성, 잠재력을 살리면서 수립되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농어촌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농촌산업의 진흥, 도·농교류 촉진,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7개 부문별 계획을 담고 있다.

4) 10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어업 미래를 짚어질 후계인력의 체계적 육성, 인력 절감형 영농기반 해결, 지식·정보화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수산업 육성, 가치 중심의 고품질 농식품 산업, 농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소비자 중심 품질관리, 산업화 역군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 보장, 농어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품목별 육성대책, 앞서가는 스마트 농정 구현

3) 민선 5기 충남비전(2010년 12월)

본 계획은 충남도정의 중장기 발전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과 민선 5기 부문별 전략 과제 제안 및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중장기 계획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민선 5기 계획 두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용적 범위는 자치행정, 지역경제, 복지, 농수산업, 교육, 문화관광, 건설교통, 환경 8개 분야별로 되어 있다

4) 본 연구의 특징

본 연구(계획)와 기존 연구와의 다른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선 5기 농정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핵심공약 사항을 도출 정책화, 사업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둘째, 민선 5기 내 실행 가능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실천과제(사업)를 도출하여 즉시, 예산에 반영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셋째, 기존의 연구(계획)에서 다루지 않았던 학교급식, 공공급식, 농어업6차산업화, 농어촌 응원운동 등 새로운 영역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는 점 넷째, 정책수립·집행자는 물론 정책수혜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계획이 수립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2-1>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비교

구분	2020 충남 농어업 · 농어촌 발전계획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계획 목적	-충남 농어업 · 농어촌 중장기 발전 비전과 정책 제시 -분산된 정책 종합적 추진체계 구축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부문별 시행계획 및 가이드라인
계획 기간	-2009년~2020년(12개년)	-2010년~2014년(5개년)
계획 내용	-10개 핵심과제 사업계획 (후계인력, 영농기반, 농수산업, 농식품, 유통, 삶의 질, 도농교류, 녹색성장, 품목, 농정거버넌스)	-7개 부문 계획 (복지, 교육, 기초생활, 자연환경, 농촌산업, 도농교류, 거점지역 육성)
수립 주체	-충남도 농수산국 주도 -전문가 참여	-충남도 계획수립 추진단(T/F) 주도 -전문가, 농어민단체 참여

구분	민선 5기 충남 비전	본 연구
계획 목적	-충남도정의 중장기 발전비전 및 전략 제시 -민선 5기 부문별 전략과제 제안	-민선 5기 농정의 방향과 목표 제시 -핵심 공약 사항의 정책화, 사업화 -실천과제 도출 및 시행계획 수립
계획 범위	-2011년~2020년(10개년) -2011년~2015년(5개년)	-2011년~2014년(4개년)
계획 내용	-8개 분야 (자치행정, 지역경제, 복지, 농수산업, 교육, 문화관광, 건설교통, 환경)	- 11개 분야의 실천계획 (친환경 · 고품질 농업, 선진 축산업, 산림자원 육성 · 활용, 청정 수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농어업 6차산업화,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지역리더 양성, 민관협력 체계 구축)
수립 주체	-전문가 주도 -관련 공무원 참여	- 협력형 계획 - 충남도 농수산국+충남도 농어업 · 농어촌혁신위원+16개농어민단체+충발연+외부 전문가

제3장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황

1.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요구 변화

○ 소비자의 안전·안심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

농산물의 시장 개방화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低質의 농산물들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건전한 식생활과 함께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실현에 기여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⁵⁾에서도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로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1순위로 뽑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 선호 추세에 부응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관행 농업에서 탈피,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로 화석연료 의존형 농업과 수입사료 의존형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산에 따른 농업생산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농어촌 공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식

농어촌농어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촌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 인구의 증가는 물론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 지역 인구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은 농촌 지역의 과소화 해소 및 도시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의 활용을 통해 농어촌 경제의 多角化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대되며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이 농어업 생산 뿐 아니라 다각화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5)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업·농어촌의 多元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국토·자연환경 보전 기능,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 기능, 휴양제공 기능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농정의 이념이 생산중심에서 농산물의 품질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환경적 역할 제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 농어촌 어메니티·농어촌 경관에 대한 관심 증대

깨끗한 환경, 매력적인 경관, 문화유산, 향토음식 등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될 것이며 농어촌 어메니티가 풍부한 지역에 거주하려는 도시민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시책이 적극적으로 전개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농어촌경관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2.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실

이처럼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는 농어촌 지역을 단순한 농어업 생산만의 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삶터), 경제활동 공간(일터), 그리고 환경 및 경관 공간(쉼터)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에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특히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의 주체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1) 생활공간(삶터)

○ 공공서비스의 수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시군별 격차도 큼

충남의 병·의원 등 의료기관 수는 1,948개소로 전국 평균 3,208개소의 60.8%에 불과하고, 인구 만 명당 병상수는 100.7개(전국 10위)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노인복지 시설은 2009년 기준 172개의 시설이 있으며 이 중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등은 10개소 이하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 시설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표 3-1>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시·군별 현황

구 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계	18	892	172	4,193	22	1,488	12	240
천안시	3	228	24	758	2	109	6	70
공주시	—	—	16	403	5	419	2	41
보령시	2	95	8	188	3	323	—	—
아산시	1	42	13	317	2	120	1	33
서산시	2	11	12	333	2	189	—	—
논산시	3	186	20	332	2	93	1	5
계룡시	1	29	2	50	—	—	1	52
금산군	2	91	12	195	1	30	—	—
연기군	1	64	12	271	2	139	—	—
부여군	1	76	7	247	—	—	—	—
서천군	—	—	6	226	2	66	1	31
청양군	—	—	4	83	—	—	—	—
홍성군	1	32	6	168	1	—	—	—
예산군	1	38	13	196	—	—	—	—
태안군	—	—	6	128	—	—	—	—
당진군	—	—	11	298	—	—	—	—

자료: 충청남도, 2010, 통계연보

또한 충남의 아동복지 시설은 2009년 기준 18개소로 2002년에 비해 3개소 증가하였을 뿐이며, 특히 4개 군(서천, 청양, 태안, 당진)은 시설이 없어 놓여준 아동복지 시설 수준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또한 2009년 기준 충남지역에 22개소가 있으나 군 부 지역에는 6개소(27.3%)만이 개소되어 있음. 이처럼 장애인 복지시설은 도시지역에 편중된 樣相을 보이며 놓여준 지역의 장애인과 가족들은 복지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복지 시설은 충남지역 전체 12개소뿐이며 군부 지역에는 1개 군(서천군)에만 설치되어 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 및 프로그램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읍·면의 학교는 급속히 소규모화 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각 급 학교의 통폐합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3-2> 각급 학교 통폐합 실태

단위 : 동,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초등학교	본교 폐지	1	6	13	17
	분교장 폐지	1	3	7	8
	분교장 개편				1
	소계	2	9	20	36
중 학교	공립중 폐지	1	1	1	1
	사립중 폐지	2	1		
	소계	3	2	1	1
고등학교	사립고 폐지	1			
합 계		6	11	21	27

자료: 충청남도, 2010,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취약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2008년 기준)은 일반 상수도의 경우 시부 95.9%, 읍부 86.5%인데 반해 면부는 54.9%에 그치고, 광역 상수도의 경우 시부 95.7%, 읍부 82.8%인데 반해 면부는 36.0%로 도농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또한 2008년 기준 충남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61.8%로서 전국(평균 88.6%)에서 가장 낮으며, 시 지역 69.4%에 비해 군 지역은 46.8%로 농촌지역은 더욱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충남 농어촌 지역 교통서비스 수준을 살펴보면 16개 시·군 23개 업체에서 농어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구 과소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운영효율이 낮아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 되고 있다.

농어촌 정보화 및 정보이용 서비스 수준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9개의 정보화마을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정보화 교육은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정보교류로 경영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에 일정 부문 기여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미약한 수준이다.

주민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여가분야의 만족도가 농촌지역 삶의 질 분야 중7개 분야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지역에 문화·여가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현재 충남도내 공립박물관 9개, 공연장 31개소 수준임)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일부 농촌지역 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농촌주택 신축과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마을기반 시설 정비가 연계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낮다. 또한 농촌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지원이 미흡하여 경관을 저해하는 주택이 건설되거나 질적 수준이 낮으며 개별 주택 중심으로 정비가 진행되어 부분적인 주거환경 개선은 가능하나 마을 단위의 환경·경관·어메니티 향상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및 시행 필요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농촌 서비스 기준을 반영하여 성과 목표 및 지표 재설정 필요하며,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의 주기적 점검과 컨설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항목과 수준을 의미함
- 현 동 서비스기준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의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0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을 제도화함

2) 경제활동 공간(일터)

○ DDA와 FTA로 인한 충남 농어업의 위기

FTA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인 5대경제권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아세안, 일본, EU 등이며, 이들 국가들과의 FTA는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림어업부문에서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림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농어업 비중이 큰 충남 지역은 더 큰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한·미, 한·EU FTA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충남의 경우 발효 후 15년 차에 1,924억원 감소 추정⁶⁾된다. 피해 추정 품목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경우 양돈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며, 과수의 경우는 포도, 원예는 토마토, 임업은 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DDA·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이 없다면 본격적인 개방의 확대는 충남의 농림어업부문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농림어업부문 총생산 감소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5년 47조 4973억원에서 2009년 65조 7,59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충청남도 농림어업 생산은 2005년 3조 3,968억원에서 2009년 3조 3,62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2009년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 생산이 5.11%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국의 전체 지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2.4%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09년 전국 농림어업 생산 중 충남 농림어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16%로 경상북도(15.02%)와 전라남도(13.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 친환경농업 인증비율 매우 낮으며 지역편중 심화

충남 친환경농업(유기+무농약) 경지면적은 전체의 1.25%에 불과하며, 친환경 농업 인증

6) 충청남도(2011)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농가수도 1.9%로 매우 낮다.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2013년 폐지 예정인 저농약 인증비 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아산+홍성지역에 친환경농업 인증건수가 편중되어 있으며, 두 지역의 경우 충남 대비 건수 28%, 농가 70%, 면적 61%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의 농업법인은 1,060개(2009년 말)로 전남에 이어 2위임.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친환경농업 조직화는 초기단계로 판단된다.

○ 향토산업의 시장형성 및 유통기반 취약

지역별로 특성화된 향토산업을 매개로한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가 강조 되면서 충남 도에서도 향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의 대표적 향토산업으로는 금산 인삼, 서천 한산모시, 청양 구기자, 공주·부여의 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시장형성 및 유통기반이 취약한 실정이고, 특히 지역발전과의 연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표 3-3> 향토산업 육성 지원금액 및 주요 참여기업체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시·군	품목명	사업비					참여기업명	매출액('09)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금산군	고품질 인삼	1,000	500	100	100	300	고려홍삼, 금산대근, 홍삼 등 29개 업체	53,843
부여군	굿뜨래 밤	1,120	500	250	250	120	밤뜨래영농법인, 부여밤영농법인	4,591
서천군	한산 소곡주	1,322	661	193	193	275	한산 소곡주	2,045
청양군	구기자	1,398	500	230	230	438	구기자 조합	2,208
당진군	약쑥	987	436	215	221	115		

자료: 충청남도, 2010,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촌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내 개별 산업(1차·2차·3차 산업)간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활성화 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농어업의 가공, 판매 등 비농어업 경제활동의 취약

농가소득 향상 및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의 가공 유통, 판매, 서비스 등 6차 산업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충남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등 6차 산업화 관련 시설과 정책 모두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를 위해서는 농업인은 물론 비농업인의 경제 활동 또한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농산물의 가공유통, 향토산업 및 농촌관광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농민장터 운영, 식생활교육, 도농교류, 지역농식품 홍보 활동 등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활동이 활발해지면 비농업인 경제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 도농교류, 농촌관광 양적 기반 구축

충남도 내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등 농어촌 체험마을은 155개 마을에서 추진운영되고 있어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얼마만큼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 및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 실제로 사업추진 도중에 사업주체간의 갈등, 주민참여의 결여, 행정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충남지역 도농교류 현황을 보면,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운영하는 팍스테이 마을은 2010년 현재 34개 마을이며, 충남 내 1사1촌 자매결연은 총 736건이다. 또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교류실적(농산물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농촌체험 등)은 총 3,889건에 이른다.

<표 3-4> 농어촌 체험·휴양 기반 구축 실태 및 방문객 수

단위 : 개소(누계), 백만원, 천명

구분	농어촌 체험·휴양 시설							방문객			
	녹색 농촌	산촌 생태	어촌 체험	전통 테마	친환경 농업체험	관광 농원	농어 촌민 박	계	체험 방문	견학 (교육)	기타
2006년	31	18	7	19	0	66	1,167	176	124	44	8
2007년	45	24	7	33	4	67	1,229	197	148	25	24
2008년	58	29	7	39	6	67	1,372	244	198	29	17
2009년	71	32	8	39	8	74	1,393	276	232	29	15

자료: 충청남도, 2010,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각종 재해대비에 취약

지구 온난화, 집중 호우, 가뭄 등 기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농어업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격 불안정 및 시장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대비 생산기반 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며, 또한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환경 및 경관 공간(쉼터)

○ 식재면적의 감소 및 산림생태계 감소

도시확장, 도로개설, 임목벌채 등의 개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식재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산림이 단절되는 파편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 서식공간(biotop)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충남 서북부 지역의 개발사업, 도로·철도의 개설, 과수원 등으로의 산림전용에 따라 산림이 단절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 산림, 공원, 사구, 습지 등 자연환경 훼손우려 증가

충청남도에는 자연공원 6개소, 도시공원 715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타 도에 비해 공원지정 면적이 좁고 공원이용을 위한 접근성도 좋지 않아 도민의 공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충청남도에는 우리나라 해안사구 133개 중 약 32%인 42개소가 분포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습지주변의 집약적 토지이용, 간척 및 매립, 개발사업 등으로 습지 생태계의 오염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농어촌지역 경관에 대한 체계적 계획 및 관리 대책 미흡

충청남도와 일부 시·군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창출을 위한 경관법(충청남도 2009.12, 아산시 2009. 3/ 당진군 2009. 6)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서산시 2009.12/ 금산군 2007. 4)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나,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지역에 한정된 실정이므로 농어촌 지역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환경 및 경관 훼손의 원인 중 하나는 농어촌 생활 및 생산활동에 따른 각종 쓰레기(농업용 폐자재, 생활쓰레기, 폐어구 등) 증가에 비해 처리능력과 환경개선 활동은 미흡하여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 백제·내포문화권 중심의 사업추진과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 미흡

백제문화권 및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 정비사업 추진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굴, 보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화권역 특정지역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법적면적 제한으로 인하여 문화권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권형 특정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요구 된다.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 수요관리 요구

충청남도의 경우 강수량이 비교적 풍부하나, 강수의 계절적 편중으로 하천의 유량변동이 심하며, 수자원 이용가격이 실제 생산원가를 밑돌아 물 사용량이 많다. 또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신규 용수원 확보에는 주력한 반면, 효율적 수자원 운용을 위한 용수의 수요 관리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도시화 및 산업화, 인구증가 등에 따른 수질오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 향상, 삶의 질적 수요 증대에 따라 양질의 물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4) 지역의 역량

○ 농어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충남지역의 농가수 및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어가수 및 어가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충청남도의 농가수는 2005년 16만 3,197가구에서 2009년 15만 8,528가구로 연평균 2.86% 감소한 반면, 전국 대비 농가수 비중은 2005년 12.82%에서 2009년 13.27%로 증가했으며, 충청남도의 농가 인구는 2005년 44만 6,022명에서 2009년 41만 7,312명으로 연평균 6.44% 감소한 반면, 전국대비 비중은 2005년 12.99%에서 2009년 13.39%로 증가 하였다.

<표 3-5> 농업가구 및 인구변화 추이

단위 : 가구, 명, %

구분	전국		충청남도	
	농업가구	농가인구	농업가구 (전국대비 비중 : %)	농가인구 (전국대비 비중 : %)
2005	1,272,908	3,433,573	163,197(12.82)	446,022(12.99)
2006	1,245,083	3,304,173	161,986(13.01)	437,295(13.23)
2007	1,231,009	3,274,091	161,025(13.08)	433,585(13.24)
2008	1,212,050	3,186,753	160,734(13.26)	428,273(13.44)
2009	1,194,715	3,117,322	158,528(13.27)	417,312(13.39)

자료: 충청남도, 2011,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한편, 충청남도의 어업 가구수는 2005년 1만 505가구에서 2009년 1만 1,132가구로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5.97%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어업가구수 비중 또한 2005년 13.14%에서 2009년 16.05%로 증가했다. 또한 충청남도의 어가 인구는 2005년 2만 7,309명에서 2009년 2만 8,537명으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4.50%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도 2005년 12.35%에서 2009년 15.53%로 증가하였다.

○ 지역(마을)단위의 인적역량 부족 및 지역리더의 부재

최근 농촌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Top-down approach)에서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Bottom-up approach)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지역의 인적역량 부족과 지역리더의 부재로 인해 실제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당초의 의도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새로운 인적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

농촌지역의 과소화 해소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수준의 차이가 있다. 서천군, 금산군, 홍성군의 경우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 시군에서는 아직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내발적 발전 토대 확산

지역밀착형 학교인 홍성군 홍동면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勞作교육과 인성교육,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공급품의 기능과 주민의 역량강화에 기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역 내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 사례가 충남 농촌지역에서도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4장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비전과 전략

1. 농어촌개발 방식의 전환 요구 및 농어촌의 중요성

1) 농어촌개발 방식의 전환 요구

○ 충남의 外來型 지역개발의 한계

충남은 2009년 540억 달러의 수출실적으로 전국 1위, 29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국내무역 흑자의 71% 담당하고 있으나, 충남경제의 성장은 대부분 수도권에 인접한 서북부 지역에 진출한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성장 과실은 외부로 유출되고 실질적으로 충남도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外生的 개발전략에서 內發的 발전전략으로 전환

외생적 개발전략은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외부자본의 유치를 통해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지역의 쇠퇴를 가져오고 지역의 종속적·왜곡적·파괴적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통합된 발전을 추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역 내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발전 발전전략은 외부와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지역의 발전동력과 발전 주체를 기본적으로 지역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 불가피

충남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의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19.5%, 생산액 7.2%를 차지하고 있다(2008년 기준). 충남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 어업의 비중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서북부 지역과 계룡시 등 5개 시군을 제외하면 농림어업은 충남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충남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어업의 발전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충남의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 아산시 등 서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서의 농업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며 이러한 농업생산(1차 산업)을 기초로, 농식품 관련 2, 3차 산업이 성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의 쇠퇴는 곧 지역경제의 쇠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은 농어업인 뿐 아니라 충남 도민 모두에게 필요

도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권리)보장을 위해서 충남 농어업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글로벌 위기(경제위기, 자원위기, 환경위기 등)로 인한 미래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내발적 발전의 정의】

첫째, 근대화론에 입각한 성장제일주의를 부정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실현을 추구

둘째, 타율적·종속적 발전을 부정하고, 각 사회는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미래전망에 따라 발전

셋째, 공생사회의 실현을 추구

넷째, 주민 참가와 협동, 자치에 의한 발전 추구(박진도)

- 지역의 기업이나 조합 등의 단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지역의 문화적 토대 위에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宮本憲一, 1989)
- 지역 자원과 힘(impulses)에 의해서 개발되는 지역개발(local development)을 의미함(Picchi, 1994)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주민의 자조 노력을 기본으로 하면서 외부의 지원을 자주적(주체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保母武彦)

○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지역경제의 순환, 생산과 소비의 순환(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 도시와 농촌의 순환(공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간의 공생(협동과 연대)과 지역자치의 실현이 필요하다. 또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의 기본원리는 생태계의 순환 지역 자원의 순환, 환경재생, 지역자원 순환형 농업이 포함된다.

2) 농어업·농어촌의 중요성

○ 지역주민(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충남 도민의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 농어촌 어메니티,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환경 및 경관 공간으로서의 농어촌 역할이 될 것이며 농수산물을 파는 농어업에서 도시민이 농수산물과 어메니티를 사러 오는 농어촌으로 전환 또한 농어촌은 도시에 건강, 휴양, 정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도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都農相生·都農交流를 통한 농어업인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 된다.

○ 도시민의 새로운 삶의 터전 제공

농어촌 지역으로 신규 유입되는 귀농귀촌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공간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 농어촌 지역 경제활동의 다각화

농산물의 가공 및 마케팅, 새로운 기업의 창업, 전통산업과 농어촌 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동의 다각화가 가능하며,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농어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대된다.

2. 충남 농정의 비전, 목표 및 전략

1) 비전

■ 농어업인 · 소비자 ·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 농어촌 사회

-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인간의 공생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함.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의 순환,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 도시와 농어촌의 공생이 이루어지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 경제 및 충남 도농 공동체 형성

2) 목표

■ 목표 1 :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및 열악한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 목표 2 :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 충남 도민 및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생산보급하는 지역 먹을거리 체계를 구축

■ 목표 3 :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인적·물적 정보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도농 공동체 형성

3) 3대 추진 전략

■ 전략 1 : 친환경 · 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

- 친환경 농어업과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확대하고 이를 지역순환 식품체계로 뒷받침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안심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부가가치 증대를 실현함

■ 전략 2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 농어촌 사회를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지

역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역 내 자생력을 키우는 내발적 발전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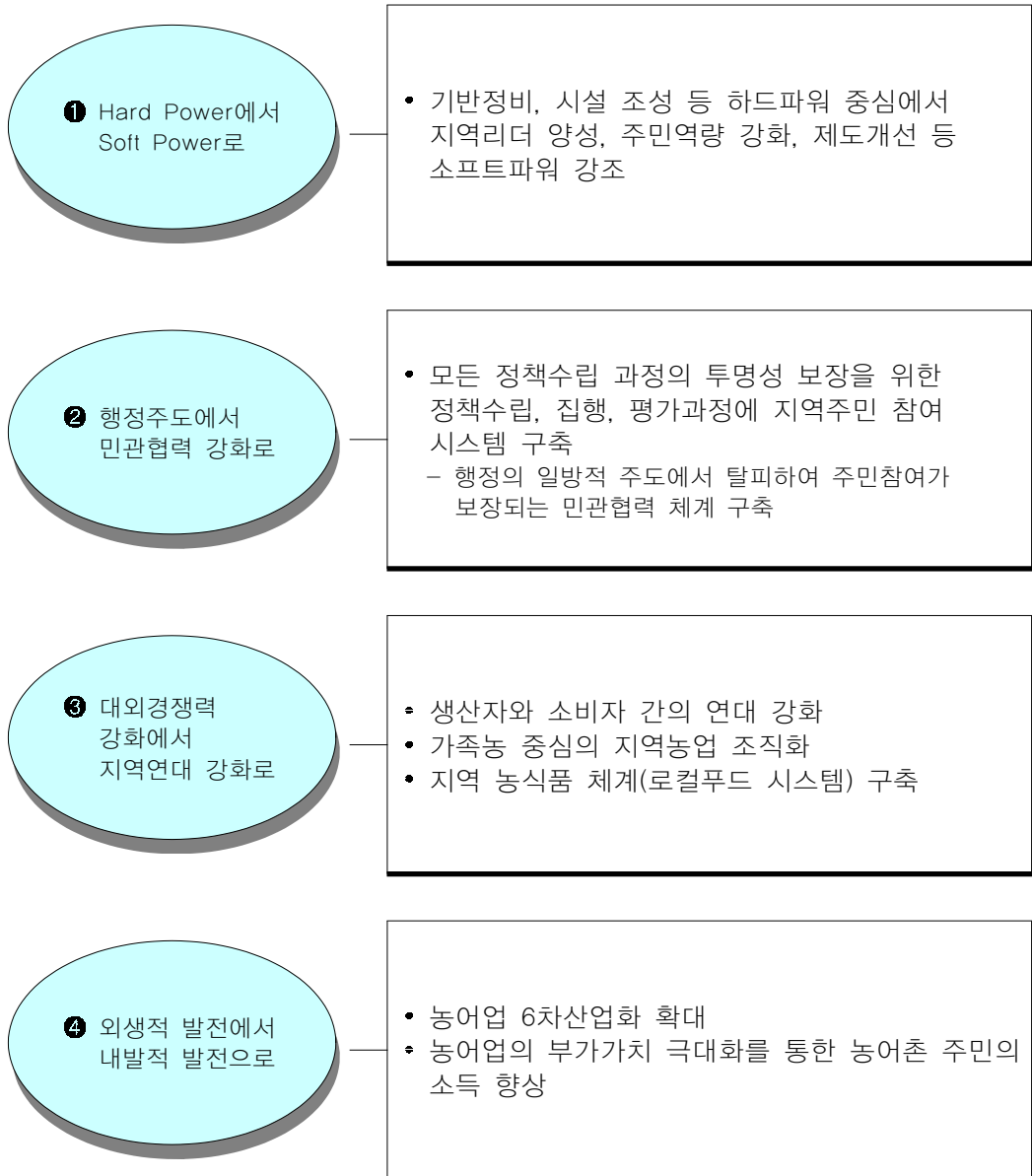
■ 전략 3 :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

-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지역만들기)의 성공을 위한 가장 근본적 요소는 그 지역주민의 주체역량이 얼마나 배양되었는가 하는 점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학습·실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역량 배양

비전	<p>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p>
목표	<p>●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 충남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p>
추진 전략	<p>●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p>
추진 분야	<p>● 친환경·고품질 농업 ● 선진 축산업 ● 산림자원 육성·활용 ● 청정 수산 ●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농어업 6차 산업화 ●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 운동 ● 지역리더 양성 ● 민관협력 체계 구축</p>

<그림 4-1> 충남 농정의 비전, 목표 및 전략

3. 충남 농정의 특징



제5장 세부분야별 추진방안

1. 친환경·고품질 농업

1) 현황 및 문제점

(1)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또한 국내에서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에 힘입어 생산량과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연평균 7~9%의 성장세). 그에 따라 2020년이 되면 전체 농산물 시장 거래규모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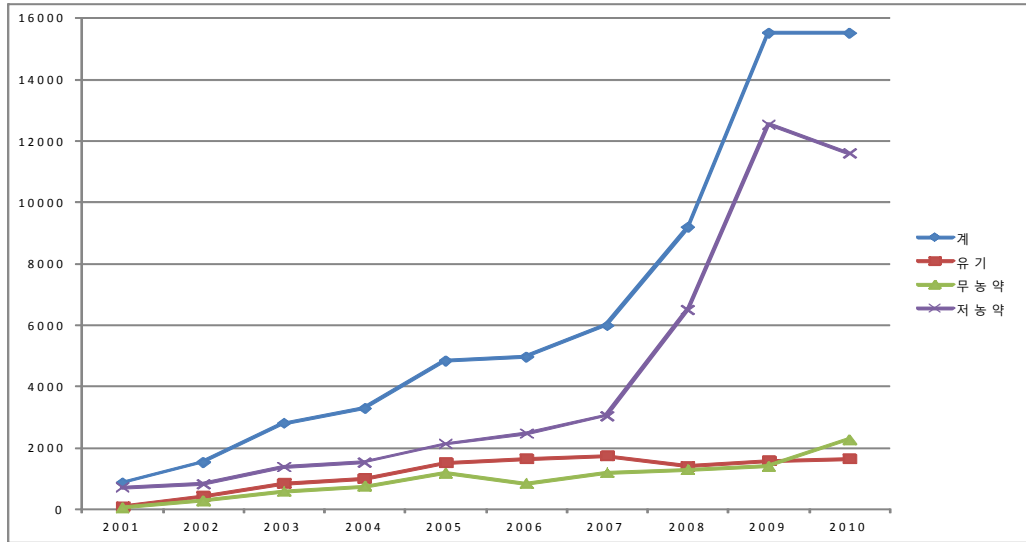
<표 5-1>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4	2015	2016	2020
시장규모	31,927	34,117	36,506	39,678	48,622	53,111	46,475	66,283
전년대비 증가율		6.9%	7%	8.7%	7.3%	9.2%	-12.5%	

충남의 친환경농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 대비 8.0%(전남, 경북, 충남, 강원 순)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충남의 경지면적 대비로는 6.6%(무농약 이상 1.7%)를 차지하고 있다. 인증종류별 면적은 유기 10.7%, 무농약 14.6%, 저농약 74.7%로 저농약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으며, 품목별로는 채소 41%, 과일 38%, 특용작물 10%, 곡류의 순이다(충청남도, 2011).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홍성과 아산지역의 선도적 유기농가들에 힘입어 유기농은 타지역보다 앞서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친환경농업의 확산이 더딘 편이다.

<그림 5-1> 충남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추세(2001~2010)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조직 현황을 보면, 작목반 138개, 농업법인 33개, 연구회 20개, 기타(농협, 주식회사 등) 25개 등 총 216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충청남도, 2011). 최근 들어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지역의 대표 친환경생산자조직으로서 발돋움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지역 친환경 생산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점은 아직까지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친환경농산물은 특히 다양한 직거래 방식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판로(특히 과일과 채소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방식이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생협이 비교적 안정적인 판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점유율이 낮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일반 도매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친환경농업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확산의 걸림돌은, 한국 농가의 고령화 추세 때문에 관행농보다 노동력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 쌀

충남의 농가들에게 쌀은 가장 중요한 소득활동이다. 쌀 생산에 도내 농가의 59%, 농지의 70%가 참여하고 있고, 그 중 1ha 미만 영농규모가 56%, 농가 평균 1.46ha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충청남도, 2011: 29). 충남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약 7,000ha가 줄었으나, 전체 경지면적에서 식량작물이 점유하는 비율은 80% 수준으로 5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타 도에 비해서 식량작물의 생산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이준우, 2011). 하지만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에(2005년 588천원/10a => 2010년 614천원), 소득률은 점차 감소(2005년 62.1% => 2010년 52.8%)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농가경제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충청남도, 2011).

<표 5-2> 충남의 작물유형별 재배면적(2004년, 2008년) (이준우, 2011)

구분	2004년		2008년		증감	
	면적(ha)	점유율(%)	면적(ha)	점유율(%)	면적(ha)	점유율(%)
식량작물	180,697	79.90%	173,248	80.20%	-7,449	-4.10%
과일류	11,030	4.90%	10,599	4.90%	-432	-3.90%
채소류	26,986	11.90%	25,659	11.90%	-1,328	-4.90%
특용작물	7,430	3.30%	6,571	3.00%	-859	-11.60%
합계	226,143	100.00%	216,076	100.00%	-10,067	-4.50%

시설 현황을 보면, 생산량 대비 가공능력은 56.1%, 저장능력은 85.5%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3> 충남의 쌀 가공 및 저장능력 (이준우, 2011)

구분		농협(톤)	민간(톤)	합계(톤)	생산량 대비
RPC (미국종합처리장)	가공능력	356,800	86,748	443,548	56.10%
	저장능력	188,202	43,499	231,701	37.40%
DSC (건조저장시설)	저장능력	45,468	18,427	63,895	
일반저장		—	—	381,000	48.20%

브랜드 현황을 보면, 현재 충청남도 14개 시·군에는 총 296개의 쌀 브랜드가 있으며, 시·군별로 1개의 공동브랜드가 존재하고 충청남도 공동브랜드인 “청풍명월”이 있다. 하지만, 브랜드의 위계질서가 명확하지 않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청풍명월 브랜드의 경우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아 참여지역이 제한적이다(이준우, 2011).

(3) 과수·원예

충청남도의 원예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예작물 재배면적 비중(전국 대비) 역시 2009년 6.6%로 2000년(9.4%)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다만, 채소류는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과실류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채소류 중 엽채류, 근채류, 양념채소류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인 반면 과채류 재배면적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김병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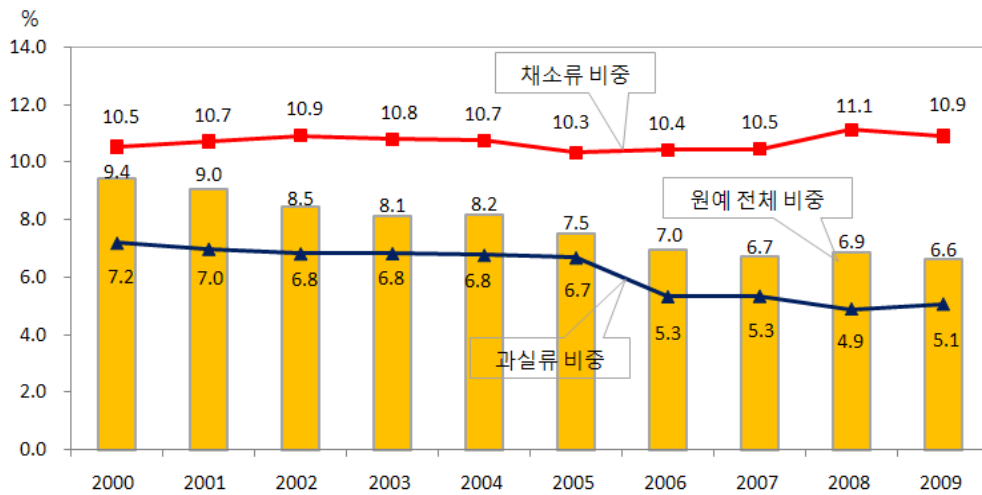
<표 5-4> 충남의 원예작물 생산 현황

단위: 천ha, 천톤

구분		2000		2005		2009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채소류	전국	353.7	10,483.2	281.9	9,097.4	246.6	9,352.6
	충남	37.2	1,211.2	29.1	960.4	26.9	1,013.0
과채	전국	68.4	2,406.7	59.2	2,488.0	54.7	2,355.5
	충남	9.7	412.7	9.3	426.8	10.1	459.9
엽채	전국	72.9	3,744.5	54.4	2,878.6	51.9	3,098.6
	충남	5.6	399.6	3.4	250.2	3.8	300.5
근채	전국	44.6	1,914.5	30.2	1,395.2	26.4	1,355.2
	충남	4.7	214.0	2.5	125.8	2.5	128.6
양념	전국	167.8	2,417.5	138.1	2,335.6	113.6	2,543.2
	충남	17.2	184.9	13.9	157.7	10.5	124.0
과실류	전국	172.8	2,428.7	154.7	2,593.0	157.1	2,881.0
	충남	12.4	173.3	10.4	210.4	8.0	173.2
원예 전체	전국	526.5	12,911.9	436.6	11,690.4	403.7	12,233.6
	충남	49.7	1,384.5	39.5	1,170.8	34.9	1,186.1

자료: 통계청

<그림 5-2> 충남의 원예작물 재배면적 비중(전국 대비)



자료: 통계청

과수산업의 경우, 사과 생산액은 2009년에 전국 8,130억 원, 충남은 489억으로 6% 점유 (전국 4위), 배는 전국 2,499억원, 충남은 541억 원으로 21.6%(전국 2위), 포도는 전국 5,040억원, 충남은 368억 원으로 7.3%(전국 4위), 복숭아는 전국 1,494억원, 충남은 90억 원으로 6%(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남지역 과일의 특화 계수는 2009년 기준 사과 0.46, 복숭아 0.46, 포도 0.55로 타 지역에 비해 특화율이 떨어지며, 배의 경우 1.64로 특화계수가 높은 편이다(김경필, 2011).

<표 5-5> 과일 품목별 생산액과 충남 비중(2009년)

구분	전국	충청남도		
	생산액	생산액	생산비중	순위
사과	813.00	48.86	6.01	4
배	249.90	54.05	21.63	2
포도	504.60	36.84	7.30	4
복숭아	149.40	8.96	6.00	4

원예와 과수부문 모두 한미 FTA의 체결과 한중 FTA의 추진 등으로 국내시장이 수입 농산물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가장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유통구조의 불합리성 문제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충남이 수도권 시장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충남지역의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지역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수와 원예 농산물의 특성상 신선한 산물을 가급적 소비자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본 추진전략

(1) 친환경 고품질 농업 생산기반 확립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의 양성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지역순환농업시스템의 구축
- 친환경농업 단체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
- 지역리더 양성 및 관리

(2) 친환경 고품질 생산물에 걸맞은 유통시스템 확립과 6차산업화 추진

-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확대와, 직거래 등 소비자 지향적 지역유통 강화
- 농촌 직판 강화와 가공 활성화를 통한 6차산업화 추진 강화
- 지리적 표시제 가공품의 활성화, 전통식품업체의 활성화 등을 통한 고품질 지역특산물 개발 활성화

(3)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기반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 관행농업의 저투입화, 친환경화 견인
-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저투입 지역순환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 최근 국제기구 FAO에서 제안, 권고하고 있는 기후변화 스마트 농업 개념을 도입하여 충남 농업의 친환경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
- 지역자원 기반의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창출과 지역 특화 품종의 발굴 개발

3) 민선 5기 실천과제

(1) 사업명: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기반 구축

■ 세부사업내용

- 기존의 생산 위주 정책지원이 아니라, 생산-유통/가공-판매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함
 - 고품질 지역농산물의 6차산업화와 농촌 직판을 지향함
 - 농업 이외 타 분야 주체들과의 지역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대화와 협의의 활성화
 - 친환경 고품질 농식품을 위한 지역 브랜드의 육성, 지리적 표시제 농식품의 활성화, 전통식품업체의 활성화
 - 지역 내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의 활성화 및 지역 외 진출 확대

■ 기대효과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 농가의 부가가치 수취 증진
- 생산만이 아니라 판로를 보장해줌으로써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2) 사업명: 친환경 고품질농업 인력 양성

■ 세부사업내용

- 친환경 고품질농업을 주도할 차세대 인력과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과의 연계, 지역자원순환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역자원들과의 결합, 농업 이외 분야와의 지역적 연계와 네트워킹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리더의 발굴과 지역조직의 육성
 -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 친환경 고품질농업의 선도그룹으로서 광역 친환경농업 생산자 연합단체의 육성 및 후원을 통한 마케팅보드로의 성장 지원
 - 축산, 임업, 수산업 등으로의 확산 및 상호 연계

■ 기대효과

- 충남지역 친환경 고품질농업의 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
- 지역조직과 지역리더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

(3) 사업명: 저투입-지역순환형 스마트 농업의 확산 보급

■ 세부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을 넘어서 에너지와 자원의 저투입과 지역순환형 농업을 지향하는 기후변화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farming)의 확산과 보급
 - 에너지·자원 저투입 농업에 대한 연구 및 활성화
 - 지역순환형 농업체계의 연구 및 활성화
 - 지역 고유 품종의 발굴 및 육종, 보급

■ 기대효과

- 농업 생산비용 절감 효과: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물과 기계·화학농자재, 종자 등 지역외부 투입자원의 절감을 통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 지역 자연환경 보전 효과: 지역의 자원을 덜 사용하고 에너지를 덜 사용함으로써, 지역 자연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억제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음
- 충남지역 농산물의 청정이미지 제고: 친환경농업보다 더 앞선 농업방식의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충남 농산물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충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4) 사업명: 신선한 제철 과일 채소 소비 증진 사업

■ 세부사업내용

- 전 세계적으로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의 소비를 증진하고, 계층 간 소비의 불균등을 완화하며, 어려서부터 농사체험과 미각교육 등의 식교육을 통해 과일과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에게 신선한 제철 과일 채소의 소비를 증진하는 캠페인과 공급사업을 병행함
 -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영양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과일과 채소의 공급을 증진함: 과일 채소 공급 프로그램의 시행
 - 공급사업과 식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함
 -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대부분에서 실시하는 사업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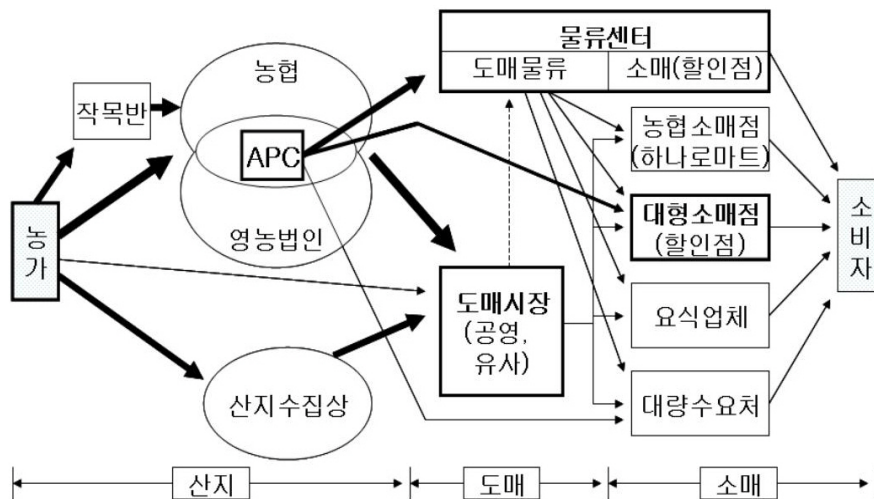
- 영양취약계층의 과일 채소 섭취량 증대를 통해 영양 불평등의 완화: 단기적으로는 과일 채소의 섭취 증진을 통한 즉각적인 건강개선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과일 채소에 대한 선호도를 높임으로써 식습관을 유지시킬 수 있음
- 제철 과일 채소의 공급불안정성 완화: 수확기 과일 채소의 일부를 지자체가 생산자 협회와의 협조 하에 구매하고, 이를 각급 학교나 공공급식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물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수확기 과일 채소의 가격안정에 기여함

2. 지역순환 농식품체계의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1) 중앙집중적 유통구조의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역유통의 비활성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장악 문제

현재 수도권 집중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하여 지역시장(local market)이 갈수록 비활성화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일방적 결정구조가 고착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직거래 시장의 발전이 더욱 악화되며, 가까운 지역시장 대신 수도권 시장을 의존해야 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접근성 악화 문제와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5-3>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스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표 5-6>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전송된
품목 및 물량 예시(2009)

품목	거래물량 (톤)	전송물량 (톤)	거래대비 전송비율(%)	충남 자급률 (2008)	비고
양배추	843,990	335,630	39.77	191.4%	
얼갈이배추	525,958	121,903	23.18	379.3%	배추
호박	943,187	118,311	12.54	405.1%	
마늘	400,267	110,014	27.49	222.6%	
풋고추	352,938	76,623	21.71	253.5%	
상추	400,097	43,732	10.93	207.3%	
오이	1,494,175	42,183	2.82	507.8%	
파	491,515	44,946	9.14	300.1%	

통계자료가 현재 수집되고 있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표 5-6>의 경우처럼 천안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20% 정도는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재전송된 것들이다. 즉, 충남 지역 농민들이 지역 도매시장보다는 우선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다시 재전송되는 물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산지 생산자조직과의 직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산지 생산자들이 점차 외부 대형유통업체에 종속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유통시장 역시 지역 도매시장과 재래시장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형유통업체의 장악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통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의 중소상권이 몰락하며, 지역 내 농민들의 거래조건 역시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정보, 의사소통과 네트워크가 취약한 문제

지역 내 수요처(가공업체, 유통업체, 급식업체, 외식업체, 가정 등)와 생산자 간의 정보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이 부재하다. 따라서 지역 생산자들의 경우 무조건 일단 중앙으로 물류를 올려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역 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공공조달 등에서 지역산 농산물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각 주체간의 네트워크 지원이 미흡하고 그에 따라 네트워크가 취약한 결과 지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가공, 음식 등)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는 정책지원이 주로 하드웨어 쪽에 집중되면서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교류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체계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가령, 충남도의 5년간 식품가공분야 투자예상액 1,382억원 중 기계설비 등 하드웨어 분야가 744억원 (54%)인 반면에, 홍보·마케팅 14%, 품질향상 12%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충남도, 2010).

(3) 생산물의 지역특성이 낮은 문제

통계 자체가 미흡해서 객관적인 현황파악이 쉽지는 않지만 충남내 농식품 가공업체들의 원재료 구매가 지역적인 수준에서 대체로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64개 업체 (31%)가 타도 농산물, 33개 업체(16%)가 수입원료를 사용하고 있었다(충남도, 2010) 그에 따라 최종 생산물의 지역적 특성이 부각되지 못함으로써 지역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상생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농산물 생산자-수요처 간 정보의 부재로 인한 매칭의 실패 탓도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차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지역 고유의 특성이나 전통에 근거하고 있지 못한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표준화된 공장식 가공방식을 통해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탓에, 지역 공유의 전통적인 가공품의 다양성이 높지 않다. 그로 인해 중앙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부족하고 품질경쟁력이 뒤처지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소규모 농가가공품의 로컬푸드 직거래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농민주체의 미비와 식품가공부문 진입의 어려움, 로컬푸드 유통의 미흡 등으로 인한 제도적 장애물로 인하여 농민이 주도하는 농가내 소규모 가공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제로 만드는 다양한 농가가공품들이 공급이 미흡하다.

(4) 농식품 생산/공급과 소비 간의 관계적, 정책적 단절 문제

앞서 언급한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소통의 부재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 내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관계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 농민이 지역 주민을 위해 생산하지 않고, 지역 주민 역시 지역 농민들의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상호간의 몰이해는 지역경제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국민이나 지자체 내의 지역주민

들의 식원성 질병과 영양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근본적 대책을 위해 질 좋은 농식품의 공급을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의 생산 및 공급과 농식품의 소비 간에 존재하는 정책적 단절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을 취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식품의 생산공급(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 농정과)과, 농식품의 소비와 영양문제(보건복지부-지자체 보건위생과) 간의 인식차이와 상호소통 부재, 정책적 단절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사회적인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인 정책시행의 노력을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5) 통계자료의 미비 문제

식품제조업체, 전통식품제조업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시군구 및 충남도 수준에서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의 농업생산과 식품가공, 식품산업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가령 지역산 식재료 구매현황 및 구매비율 자료 등 현재 충남 지역의 농산물 유통흐름과 각 단계별 연계상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자료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 모두에서 결여된 상황이다. 그 때문에 정확한 지역연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2) 기본 추진전략: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충남 농식품체계의 구축

○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유통시장 확대

- 직거래 등 소비자 지향적 지역유통 강화
- 농촌 직판 강화와 가공 활성화를 통한 6차산업화 추진 강화

○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 시장의 재설정

- 충남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유치원·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에 대하여 공급되는 식재료의 친환경성과 지역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산 식재료의 사용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 모든 도민이 참여하는 농업으로의 전환

- 도농교류의 활성화: 도민 참여형 농업의 확산 체험과 식농교육의 활성화
- 도시농업 및 도시근교농업의 활성화와 비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사활동의 활성화

○ 모든 도민들의 영양 접근성 확보

- 모든 도민들이 양적, 질적으로 적절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공급체계를 정비함
- 특히 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문제로 인한 건강문제 악화를 막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식품공급을 통한 영양공급 문제에 각별히 신경쓰
- 비만, 당뇨, 아토피 등과 같은 식원성 질병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함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충남 농식품체계의 구축

- 농식품체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농업 및 식품폐기물의 측정 및 저감대책 수립 시행

3) 민선 5기 실천과제

(1) 사업명: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

■ 세부사업내용

○ 기존의 생산 위주 정책지원이 아니라, 생산-유통/가공-판매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함

- 농민장터, 꾸러미사업, 직판장 등 로컬푸드 직거래 수단의 정책적 지원
- 지역 주체들에 의한 지역내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활성화 지원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 로컬푸드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 기대효과

- 지역 주체들에 의한 지역 생산 농식품의 지역내 우선적 소비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중소농들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효과 발생 기대
- 먹을거리를 매개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확장과 발전을 통해 농촌공동체, 도시공동체, 농촌-도시공동체의 활성화 효과
-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푸드마일을 감축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2) 사업명: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립

■ 세부사업내용

- 충남 광역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지역산 식재료의 공급증진과 수요자-공급자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함
- 각종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관련자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역사회에서 공유하도록 함
- 기초 시군의 관련 활동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상호보완적 역할
- 원칙적으로는 정책기관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직접 물류에 개입할 수도 있음: 지역 외 급식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창구 역할 가능

■ 기대효과

- 지역 내 공급자(생산자)와 수요자(학교, 공공기관, 시설 등) 간의 상호 의사소통과 이해 증진
-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식재료의 공급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 지역 주체에 의한 지역 농산물 가공품의 공급 증진 효과 기대

(3) 사업명: 바른 식생활을 위한 캠페인 시행

■ 세부사업내용

- 충남 지역의 농산물을 바탕으로 하는 한식 중심의 식사, 제철 과일과 채소 섭취의 증진, 친환경 농산물 이용 증진, 텃밭 활동의 증진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바른 식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시행

■ 기대효과

- 간접적으로 로컬푸드 시장의 수요 확대 및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3. 선진 축산업

1) 현황 및 문제점

(1) 충남 축산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충청남도의 축산업을 둘러싼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과 더불어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다. 전국기준 1인당 육류소비량은 1970년 5.6kg에서 2009년 36.8kg로 약 6.6배 증가하였다.

둘째, 축산업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업·농촌의 주 소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농림업 생산액은 1990년 18.5조원 에서 2010년 43.5 조원으로 약 2.4배 증가, 이 중 축산업의 생산액은 1990년 3.9조원에서 2010년 17.4조원으로 약 4.5배 증가하였다. 농림업 부류별로도 축산이 처음으로 40%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농식품부, 2011).

셋째,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규모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사육농가수는 감소하는 반면 사육두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호당 사육규모는 1970년 한우 1.1두, 돼지 1.4두였으나, 2011년 현재 한우 18두, 돼지 1,094두로 각각 16배, 780배 증가하였다. 충남의 주요 축종별 호당 사육두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5-7> 충남의 축종별 호당 사육두수 변화

(단위 : 마리)

연도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2006	11.7	54.3	947.5	5,406.1
2007	13.4	56.4	1,087.6	6,042.6
2008	15.8	62.2	1,210.9	6,518.2
2009	17.1	64.3	1,351.4	6,896.7

출처: 충남 농정주요통계(2010)

충남의 한육우 호당 사육두수는 2006년 11.7마리에서 2009년 현재 17.1마리로 31.8%증가, 젖소 호당 사육두수는 2006년 54.3마리에서 2009년 64.3마리로 15.5%증가, 돼지 호당 사육

두수는 2006년 947.5마리에서 2009년 1,351.4마리로 29.9% 증가, 닭의 호당 사육두수는 2006년 5,406.1마리에서 2009년 6,896.7마리로 21.6%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축산업의 규모화와 더불어 전문화 경영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다음의 표를 살펴 보면 축종별 전업농 농가수 및 이들 전업농의 사육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한육우, 젓소, 돼지, 닭의 전업농가수는 1990년 1%미만을 차지하다가 2009년 현재 한육우 전업농가를 제외하고는 약 50%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 전업농의 사육규모도 1990년 전체의 5%~20%를 차지하다가 2009년 한육우를 제외하고는 8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충남 축산업이 농업분야에서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 개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8> 축종별 전업농 현황(' 90→ ' 09, 충남)

축 종	전업농 농가수 (비중)		전업농 사육규모 (비중)	
한육우	126호(0.2%)	⇒ 1,367(6.1)	12천두(5.7%)	⇒ 143(41.6)
젓 소	77호(1.6%)	⇒ 827(62)	8천두(11.8%)	⇒ 66(80.1)
돼 지	61호(0.2%)	⇒ 541(46.4)	169천두(22.4%)	⇒ 1,478(88.6)
닭	35호(0.2%)	⇒ 446(58.8)	1,372천수(15.6%)	⇒ 25,462(81.6)

출처: 충남 농정주요통계(2010)

이와 달리 충남 축산업을 둘러싼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첫째, 육류소비량이 증가하고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축산업=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어 축산업 입지가 악화되고 있다. 충남의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간 7,700천톤으로 전국 44,912천톤 대비 약 1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다.

둘째,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제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경 간 출입문턱이 낮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각종 가축전염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대량 사육을 위해서 대부분 밀집 공간에서 사육하는 현실여건상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악성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피해액은 구제역 1,551억원, AI 30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충남에서 살 처분된 가축수가 46만 6,105마리에 달한다.

셋째, 한·미FTA, 한·EU FTA 등 시장개방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축산업 경쟁력 미약한 실정이다. 각종 자유무역협정 발효이후 15년 뒤부터 충남의 축산업 생산액은 매년 1,5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양돈은 567억원, 한육우는 477억원, 낙농은 241억원, 양계는 22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사료 및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생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사료비는 축산업의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 가격상승은 축산 농가들에게 심각한 경영부담을 주게 된다. 사료가격은 2007년 이후 총 48% 인상되었다. ('07년 26.6%, '08년 41.4%, '09년 △20%)

요약해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1인당 육류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 통계기준 처음으로 축산업 생산액이 전체 농림업 생산액 비중에서 4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농가당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고 전문화 경영추세로 빠르게 구조 개편하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축산업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부정적 이미지 확산, 악성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 시장개방에 따른 큰 피해액 예상,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 환경악화 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 축산 농정은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2) 충남 축산업 정책(사업) 현황 및 문제점

충남의 축산농정 주요 시책 및 전략은 총 5개 분야인 축산업경쟁력 제고, 양질조사료 확대 생산, 축산물 유통 및 위생, 안전성강화, 가축분뇨자원화, 가축방역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별 세부사업에는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 양돈농 모돈갱신 지원, 양돈농 고압세척기지원, 양계농 안개분부시설지원 육우브랜드 육성,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등 지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지원, 생축 등 운송특장차 지원, 가축방역사업 등이 있다. 다음의 표는 기존 정책(사업)분야별 예산배분 검토한 결과-유지, 일몰, 축소, 확대-를 분석·정리한 것이다.

<표 5-9> 기존 정책(사업) 분야별 예산배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유지	76,459	35,056	75,652	67,998
－ 가축 방역	34,816	13,005	29,867	11,981
－ 가축분뇨 자원화	25,279	8,875	19,301	16,989
－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2,400	3,440	7,680	9,680
－ 축산물 유통 및 위생·안전성 강화	1,696	1,292	0	6,640
－ 축산업 경쟁력 제고	12,268	8,444	18,804	22,708
일몰	1,751	1,208	2,366	3,455
－ 가축 방역	1	1	1	2
－ 가축분뇨 자원화	0	185	367	138
－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0	20	20	40
－ 축산물 유통 및 위생·안전성 강화	0	134	176	360
－ 축산업 경쟁력 제고	1,750	868	1,802	2,915
축소	6,512	1,219	3,035	846
－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0	25	25	0
－ 축산물 유통 및 위생·안전성 강화	0	150	600	750
－ 축산업 경쟁력 제고	6,512	1,044	2,410	96
확대	22,923	15,401	64,210	43,062
－ 가축 방역	0	2,349	4,605	5,786
－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	22,923	8,632	44,037	17,489
－ 축산업 경쟁력 제고	0	4,420	15,568	19,787
총합계	107,645	58,827	156,237	127,464

주: 충남 민선5기 농어업·농어촌 혁신 기본계획(2011)의거, 2012년부터 적용·시행 예정

하지만 유지, 일몰, 축소, 확대 부분별 세부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양질조사료확대생산’ 및 ‘가축분뇨자원화’ 분야 중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확대)과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유지),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액비 살포조직 육성지원-액비 성분분석기 지원-액비살포기 지원(전부 유지), 축산환경개선제지원-축산분뇨 악취탈취제 지원-밀폐형 축분장 악취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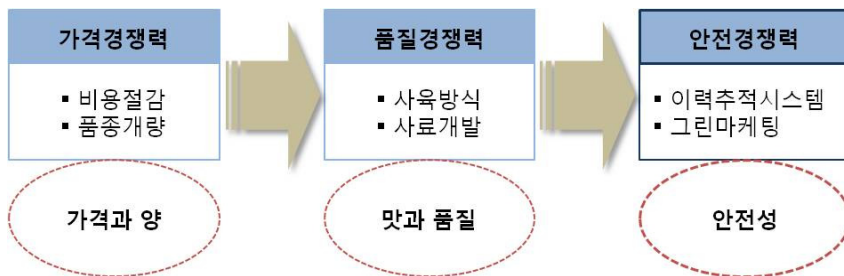
취시설 지원(전부 유지), 공동방제단 운용-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전부 유지)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5기 축산농정의 혁신을 위한 기본 추진전략 실천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유지’ 부분의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과감하게 통합·운영하고, 개별단위 농가에게 자재 지원과 같은 일회성·소액분산적인 사업비 지원을 지양하는 등의 점진적인 예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적인 축산업, 위생 및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2) 기본 추진전략

충청남도 민선5기의 농정혁신 분야 중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개선을 목표로 하는 추진전략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충남 축산업을 둘러싼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고 악조건을 타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전략,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지역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전략은 바로 ‘경쟁력 제고 전략’ 일 것이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크게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안전경쟁력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경쟁력은 모두 중요하며 이것이 모여 축산업의 종합경쟁력을 형성한다(이병오, 2008). 그러나 최근의 축산물 소비동향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은 축산물 구매시 가격에서 품질로, 품질에서 다시 안전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의 축산업 경쟁력도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은 기본적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안전경쟁력을 염두에 둔 전략을 구사함이 중요하다.



<그림 5-4> 축산업의 경쟁력 구성요소

충남의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전략으로 첫째,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둘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위생·안전 공급기반 구축, 셋째, 현장중심의 연중 상시방역체계 확립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환경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

최근 구제역과 AI로 노출된 축산업, 가축분뇨 처리문제,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발생과 면역력 저하, 생산성 저하, 품질경쟁력 저하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인간과 동물간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면서 자원순환형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는 ‘축산농장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친환경 사육시설에 필요한 시스템의 도입과 축사주변에 나무와 꽃을 심는 등의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사업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2)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위생·안전 공급기반 구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의 축산업은 가격·품질·안전성 경쟁력 등 3요소 모두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별농가는 생산단계에서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가격경쟁력’, ‘안전성 경쟁력’과 같은 요소는 정책적인 뒷받침과 지원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결국 축산물 유통분야의 구조개선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부분육 유통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생축가격 변동에 비례하여 소비자 가격 연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 중심 가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축협 유통 판매시설 확충이라든가,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도축장내 부분육 가공시설지원이 필요하다.

(3) 현장중심의 연중 상시 방역체계 확립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2011)’을 보면,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에 대비한 SOP 개선,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강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충남의 축산업도 언제나 발생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악성가축질병에 대비한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는 ‘가축방역시스템 보완 및 주요질병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단위인 개별농장의 가축과 축사에 대한 위생 및 소독, 예방백신 접종부터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3) 민선 5기 실천과제

(1) 축산농장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자원화

■ 세부사업내용

- 축사 및 주변환경 종합개선 → 축산업에 대한 국민 의식 전환
 - 전업규모 이상 농가(3천호) 축사 주변에 조경수, 방풍림, 꽃길조성등
 - 아름다운농장만들기 : '11년까지)530개소→'14년)830→'20년)2,000
-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사양관리 시스템 도입, 확대
 - 기존) 밀폐식 개체별관리 → 도입) 개방식 군사(群飼)관리
 - 친환경 사육시설(群飼system) 지원 : '12년) 15개소 → '14년) 45개소
- 계분 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기반 지속 확충
 - 계분고속건조기 : '12년) 2개소 → '14년) 6개소 → '20년) 18개소

■ 기대효과

- 환경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이면서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 가능
- 농장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양질의 조사료 확대 생산·공급의 자급화 기반 마련
- 자원 순환형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

(2)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부분육 유통시스템 구축

■ 세부사업내용

- 생축가격 변동에 비례한 소비자 가격 연동 미흡 → 생산자단체 중심 가격안정 유도
 - 농·축협 유통판매시설 : '12년) 5개소 → '14년) 16개소
- 축산물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한 도축장내 부분육 가공시설지원
 - HACCP 적용 운영 축산물위생·안전성 위해 요인 사전제거
 - 도축장내 부분육 가공시설 : '12년) 2개소 → '14년) 7개소
 -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 위생 및 안전실천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교육훈련 기회 확대

■ 기대효과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위한 공급기반 구축
- 명품 한·육우 광역브랜드 개발 및 육성 가능
- 가축 개량, 시설 자동화 등을 통해 축종별 경쟁력 제고
- 축산물 유통·가공시스템 및 시설 선진화

(3) 가축방역시스템 보완 및 주요질병 사전예방

■ 세부사업내용

-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 위주 방역system 개선
 - 가축방역 취약농가 중점 보완을 위한 전업규모 이하농가 소독장비 보강
 - 이동식 소형 소독시설 : '12년)1천대 → '14년)3 → '20년)10
- 가축폐사 원인으로 매년 증가하는 ‘소 발굽 관련질병’ 사전 예방
 - '12년 젖소 시범사업으로 추진 농가 호응도 등을 종합검토 확대
 - 소 발굽 예방백신 : '12년) 年 39천두 → '14년) 年 125천두

■ 기대효과

- 현장중심의 연중 상시 방역체제 확립
-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재발 방지대책 추진
- 인수공통전염병 및 주요가축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4. 산림자원 육성 · 활용

1) 현황 및 문제점

충남지역 산림의 총면적은 2009년 말 현재 439천ha로서 전국 산림면적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ha당 임목축적은 100.14m³로서 전국 평균 109.39m³의 91.5% 수준이다. 이를 소유별로 구분해 보면, 국유림 7.4%(32천ha), 공유림 4.7%(21천ha), 사유림 87.9%(386천ha)로 구성되어 있어 사유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산주의 경우 사군 기준 총 251천명으로 소재 45%, 부재 55%로 구성되어 있고, 임목지의 산림생산구조를 보면 Ⅲ ~ Ⅳ영급(20 ~ 40년생)이 충남 산림면적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숲 가꾸기가 필요한 실정이다(장철수, 2011).

<표 5-10> 충남 임목지의 산림생산구조

(단위: ha, %)

소계	영급					
	I	II	III	IV	V	VI
420,943	36,810	47,537	178,125	130,009	27,015	1,447
100.0	8.7	11.3	42.3	30.9	6.4	0.4

주: 한 영급의 길이는 10년이며 임목지면적은 죽림의 면적을 제외한 것임.
 자료: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2010.

한편 임산물 생산액(임목생장, 조림, 양묘 등을 제외한 순 생산액)은 2009년 3,563억원으로 전국 생산액의 약 13%로 전북, 경북, 강원 다음으로 높으며 주요 품목은 밤, 호두, 표고, 산양삼, 분재, 조경수, 창출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지역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품목은 밤, 생표고, 은행, 두릅 등, 2번째로는 취나물, 은행잎, 토석, 3번째로는 건표고, 호두, 창출, 조경수 등이다.

<표 5-11> 시·군의 생산품목 내용

품목	전국순위	생산지역	생산량	생산액(백만원)
밤	1	부여	10,276톤	20,682
	2	공주	10,560톤	17,955
	4	청양	5,431톤	10,863
	충남합계		29,118톤	56,604
호두	3	공주	51톤	1,142
	4	천안	73톤	1,059
	충남합계		204톤	3,518
은행	1	예산	1,419톤	5,638
	3	청양	90톤	451
	4	공주	130톤	389
	5	홍성	44톤	274
	충남합계		1,781톤	7,153
산양삼	2	서천	1.3톤	1,737
	충남합계		2톤	2,289
건표고	5	부여	76톤	1,996
	충남합계		448톤	10,181
생표고	1	부여	3,405톤	24,394
	2	청양	1,363톤	11,995
	3	예산	792톤	11,089
	4	공주	1,229톤	9,395
	충남합계		9,258톤	71,789
조경수	5	연기	6,489천본	35,764
	충남합계		10,533천본	119,281
분재	4	서산	37천본	1,264
	충남합계		86천본	2,663
토석	5	아산	1,080천㎥	23,255
	충남합계		7,286천㎥	66,742
창출	3	금산	0.5톤	3.7
	충남합계		1.3톤	10,168

자료: 산림청, 「2009 임산물생산조사」, 2010.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연휴양림은 총 14개소로 공유 10개소, 사유 1개소, 국유 3개소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조성중인 휴양림도 3개소(공유 1, 사유 2)등이 있으며 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은 백제문화권의 중심으로 다양한 유적과 문화를 포함하여 수목원, 생태숲, 생활권 도시 숲 등이 어우러져 있으며 총 11개 시·군 277개 마을이 임축법에서 지정된 임업진흥지역이고 2010년까지 총 32개 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조성하고 있다.

흔히 충남지역 산림자원의 일반적 문제점으로는 산림정책과 농업정책의 미연계, 밤과 표고 중심의 단순한 임업작물 구조, 산림사업의 분산적 투자로 사업성과 미약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소경재 위주의 산림생산구조와 빈약한 산림자원이다. 충남의 경우 전체 산림면적의 67% 정도가 20~40년생이다. 둘째,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가에 따른 산림관리방식의 변화 부족이다. 이는 산림에 대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한 산림관리방식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휴양림의 시설의 다변화 및 프로그램이 미활성화되어 있다. 넷째, 새로운 산림병해충 발생 증가 및 산림재해의 대형화이다. 따라서 동시다발적, 대규모의 재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산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산촌지역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산촌의 정체성, 역량 부족, 소득증진효과 미흡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

2) 기본 추진전략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 육성 및 활용

국제적 표준과 기준에 맞는 산림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구축 및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한계농지, 도시 숲 등의 신규조림, 숲가꾸기 사업 확대를 통한 탄소 흡수원 조성 및 탄소흡수기능 증진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산림바이오매스를 펠릿, 바이오에탄올 등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육성 및 탄소순환마을 조성이 필요하다.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의 사회적 기능 증진

주거,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학교 숲 조성 및 녹색 네트워크 구축과 경관림 등 마을

숲 조성 및 녹색관광, 체험·교육·소득 공간으로서의 산촌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산림휴양 문화 공간 확충 및 산림 서비스, 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산림휴양문화의 질 향상과 함께 치유공간으로서 산촌 육성이 필요하다.

(3)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산주위주에서 전문임업인, 임가 등을 사유림경영주체로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고, 임도, 임업기계화 등 저조한 산림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요구된다. 아울러 고품질 친환경 임산물의 체계적 생산유통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민선 5기 실천과제

(1) 임업과 농업정책의 통합적 추진

■ 세부사업내용

- 농산물과 친환경임산물의 생산과 유통·판매 구조의 연계
 - 산채 등 친환경 청정 임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 농·임산물 공동 수출 등 해외시장 판로 및 소비 확대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농촌과 산촌의 기능별 연계 추진
- 귀농·귀촌 등 교육과정에 임업분야 포함된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임산물 학교급식, 도농교류, 귀농지원, 임산물 소득지원 등 융·복합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도모

■ 기대효과

- 임업과 농업정책의 통합화로 산업적 측면에서 임업발전 가능성 제고
- 임업의 제약요인 개선으로 임업산업의 활성화

(2)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와 귀농지원

■ 세부사업내용

-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산촌마을 조성사업 추진
- 희망 산촌마을의 주요 테마를 산채재배로 특성화함.

- 유망 산채작물의 보급 및 시장조사
- 산촌프로그램에 귀농지원 정책의 적극적 도입

■ 기대효과

- 농촌에 비해서 산촌에 대한 귀농귀촌자의 관심이 높은 바, 효과적인 귀농·귀촌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농업과 산림정책의 통합화 가능성 모색

(3) 권역별로 특성화된 산림휴양단지 조성

■ 세부사업내용

- 내륙지역은 산촌체험기능형 산림휴양단지로 개발
- 서해안 인접지역은 생태관광기능형 산림휴양단지로 개발
- 산림휴양단지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체제 확립

■ 기대효과

- 획일적인 산촌개발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산림휴양단지 개발
- 산림휴양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

(4) 전업인 육성과 산림경영 컨설팅 제도 도입

■ 세부사업내용

- 현행 임업후계자의 실태 조사 및 산림조합의 활성화
- 임업후계자의 선정기준 강화 및 정예화된 전문임업인의 육성
 - 선진 임업현장 견학(해외연수), 위탁교육 실시 등 전문교육 강화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의 확대 추진
- 농림사업 등 보조사업 우선 지원으로 산림경영 주체로 육성
-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전문가와 연결)

■ 기대효과

- 기존 방만하게 운영되던 임업후계자의 정예화
- 임업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5)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육성

■ 세부사업내용

- 체계적·집중적 산림 유역관리로 산림사업 효과 극대화
 - 숲가꾸기, 임도 등 각종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유역 완결
-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도입 추진으로 간벌 임목 등 자원화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 목재 등 산림자원의 활용과 임업기계화 촉진
- 산주와 이용자 의견 반영한 숲가꾸기 사업량 탄력적 조정
 - 사업물량 위주의 사업에서 품질 우선의 숲가꾸기 추진
- 경영목적에 맞는 맞춤형 조림과 수종의 다양화 등 조림방법 개선
 - 용기묘목 확대, 리기다깁 신지 등 친환경 벌채로 경관유지

■ 기대효과

-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 맞춤형 산림행정으로 국민적 신뢰 확보 및 임업소득 기여

(6) 주요 임산물의 시장잠재력 분석 및 가공산업 활성화

■ 세부사업내용

- 충남 임산물 10선에 대한 시장잠재력 조사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축(예: 밤연구센터의 설립)
- 임산물에 대한 시장수요조사 및 국내외 시장개척

■ 기대효과

- 경쟁력 있는 임산물의 발굴과 시장성 있는 임산물 육성
- 임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7) 숲 가꾸기 방법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 세부사업내용

- 중앙의 6개 산림기능에 소득복합 기능 추가
 - 산주 의사반영 맞춤형 간벌, 소득사업 병행, 투자효율 향상
- 숲 가꾸기 일관시스템 도입(간벌, 수집, 지엽파쇄, 경관개선)

- 바이오매스 등 산림자원의 활용과 임업기계화 촉진
- 물량위주에서 품질 우선으로 사업물량의 탄력적 조정
- 산주의사를 최대한 반영 추진으로 공감대 형성과 소득증대

■ 기대효과

-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산주의 이해도 제고로 원활한 사업 추진
- 부문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경관파손 해소 및 경관관리

(8)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을 통한 조림사업의 활성화

■ 세부사업내용

- 산림주와 아파트의 탄소배출권 MOU 체결
- 산림주와 지역기업의 탄소배출권 MOU 체결 활성화
- 산림주와 신규개발사업주체의 탄소배출권 MOU 체결 활성화

■ 기대효과

-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의 최소화 및 지역 내 개발여건의 개선
- 탄소배출권 제도를 통한 조림으로 산림주의 경쟁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차원의 조림활성화

5. 청정수산

1) 현황 및 문제점

충청남도의 어업가구수는 2005년 10,505가구에서 2009년 11,132가구로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5.97%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어업가구 비중 또한 2005년 13.14%에서 2009년 16.05%로 증가였다. 충청남도의 어가 인구는 2005년 27,309명에서 2009년 28,537명으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4.50%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도 2005년 12.35%에서 2009년 15.53%로 증가하였다. 1970년 66,532명에 달하던 어업 인구는 2008년 26,183명 수준으로 까지 감소(연평균 5.7%)하였으나 최근 충청남도 어업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5-12> 어업가구 및 인구변화 추이

(단위 : 가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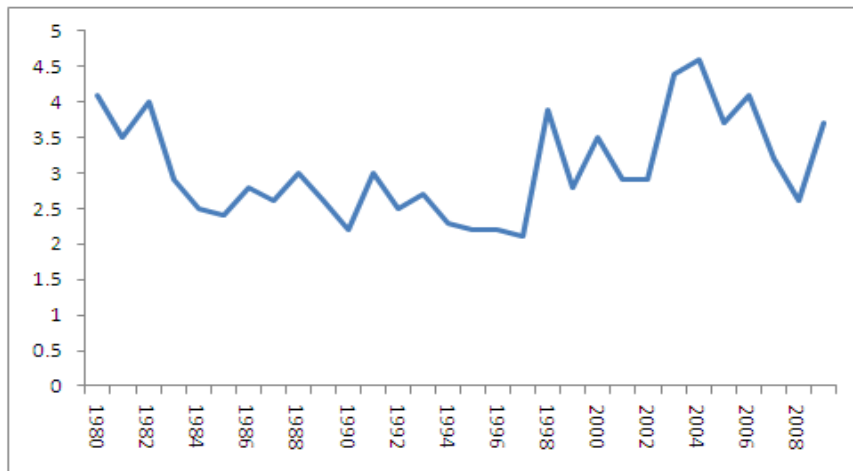
구분	전국		충청남도	
	어업가구	어가인구	어업가구 (전국대비 비중: %)	어가인구 (전국대비 비중: %)
1970			66,532	
2005	79,942	221,132	10,505(13.14)	27,309(12.35)
2006	77,001	211,610	9,992(12.98)	26,898(12.71)
2007	73,934	201,512	10,094(13.65)	26,943(13.37)
2008	71,046	192,341	9,871(13.89)	26,182(13.61)
2009	69,379	183,710	11,132(16.05)	28,537(15.53)

자료: 충청남도, 2011,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향후 2020년 충청남도 어가 인구수는 27,344명으로 0.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어가수 또한 12,062가구(1.48% 증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60세 이상 어가인구는 9,150명(2008년 기준)으로 전체 어가인구의 34.9%를 차지해 어가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어가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00년 19,831명에서 2005년 18,19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연평균 1.7% 감소) 어업 인력구조의 열악함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의 수산물 생산량은 117,275톤으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3.7%(3,175,231톤)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전국 수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4%에 달하였으나 1990년대 2% 초반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점유율이 회복되어 2004년에는 4.6%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비중이 다소 줄어 2009년 기준 3.7%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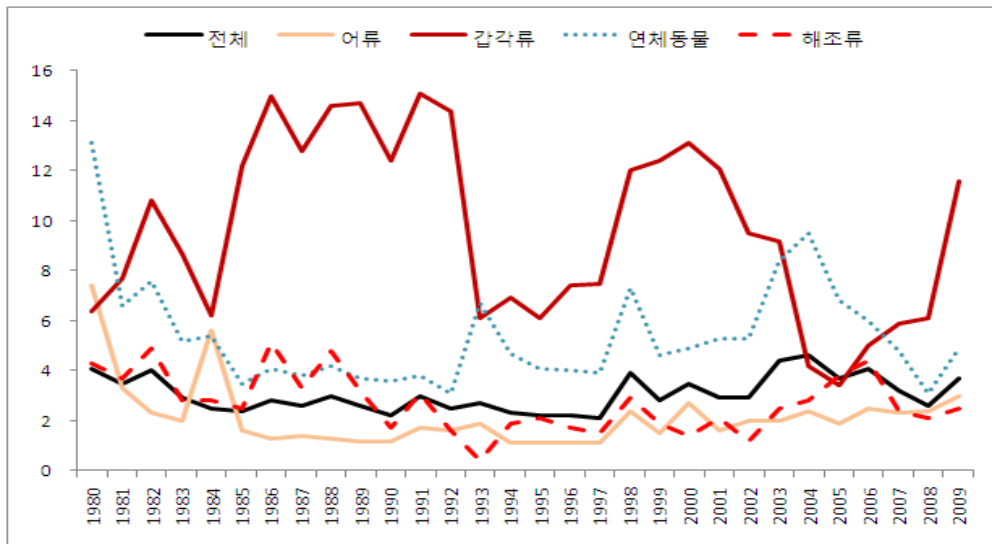


<그림 5-5> 충청남도 수산물생산량 비중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11,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 4회 자료집

어업별로 분류하면 연근해어업이 80,612톤(전국 대비 6.5%)으로 충남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양식어업은 33,865톤(전국 대비 2.5%), 내수면어업은 2,798톤(전국 대비 9.3%)을 차지한다.

수산물의 종류별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을 기준 갑각류는 11.6%를 차지하여 전국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연체동물과 기타수산물은 각각 4.9%와 4.3%로 수산물 평균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어류는 3.0%, 해조류는 2.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전국 생산량 대비 수산물 평균보다 저조한 실정으로 갑각류 이외의 품종에서는 특화도가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비중이 큰 것은 꽃게, 대하, 꽃새우 그리고 주꾸미의 생산비중이 큰 영향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어류는 1985년 이후 전체 수산물 점유율 이상의 비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충청남도의 수산업이 어가인구 대비 생산량 비중이 낮은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해조류의 경우에도 1990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전체 수산물 점유율 보다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6> 종류별 충청남도 수산물 생산량 비중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11,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 4회 자료집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 전국 생산량 대비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해면어업에서는 넙치, 까나리, 홍어, 대하, 꽃게, 키조개, 피조개, 주꾸미 등이고, 천해양식에서는 바지락, 내수면에서는 붕어, 우렁이 등이 있다. 생산량 기준으로는 멸치와 김이 가장 많으나 서해안 지역은 넓은 갯벌을 이용한 패류생산과 젓갈 생산을 위한 까나리와 꽃새우 그리고 꽃게가 주요 어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서해안은 해안의 특성상 어류양식에 적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어 충청남도 해안에서의 어류양식은 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해면어업 생산의 정체와 내수면·원양어업의 생산 감소 전망에 기인해 볼 때 양식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의 양식어장 면적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삽교방조제, 서산방조제, 대호방조제 등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충청남도의 해안선이 직선화되고 1970년에는 1,358.8km에 달하던 충청남도의 해안선 길이는 점점 줄어들어 2010년에는 1,062.1km로 줄어들어 40년 사이에 전체 해안선의 21.8%가 감소되었다.

서해안에는 전체 갯벌 면적의 약 83%인 1,980㎢가 분포되어 있으며, 충남은 14%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간척사업에 의한 해안선의 감소는 갯벌의 감소를 가져왔다 충청남도

해안의 갯벌 면적은 총5백km²에 달하지만 197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약 3백km²(총 면적의 60% 이상)가 넘게 사라졌으며 현재 가로림만 갯벌이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형 내만 갯벌이다.

갯벌의 감소는 충청남도 수산업의 중심인 갯벌어업의 축소로 이어졌다 갯벌은 어촌마을의 마을어장으로서 어촌사회를 지탱하여 주고 있었으나 갯벌의 감소로 인하여 마을어장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어촌사회의 소득감소와 인구유출로 이어져 충청남도 수산업의 전체적인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 기본 추진전략

(1) 고품질 친환경 품종 집중 육성 및 소득 안정화

수산자원의 남획, 해양 오염 등으로 자원 고갈문제가 대두되고,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웰빙 열풍으로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웰빙·안전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발전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역별 특화품종을 선정하여 생산 인프라 조성, 유통체계 및 관리체계 구축 등 수산물의 어획 시부터 양륙장에서의 하역 및 수산물의 유통까지 전반에 걸쳐 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고품질의 지역별 명품 수산물이 주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구축

해양 환경 변화에 따라 어업 여건이 급변하고, 태풍·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수산자원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충남도내 수산업의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품종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시켜 미래 수산업의 경쟁력을 구축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민간 영역으로 확산·보급시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실현시키고, 관련 교육을 보다 강화시켜 위기 대처능력 향상 및 어업경영의 변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어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어촌후계인력 및 수산전문인력을 유치·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민선 5기 실천과제

(1) 사업명: 지역명품 수산물 특화 지원

■ 세부사업내용

- 향후 유망되는 양식품종을 지역특화 고품질 수출전략 품종으로 개발하고자 1시·군 1품종 수산물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
 - 보령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 서산 갯벌 참굴 양식 육성
 - 서천 김 클러스터 구축
 - 태안 해삼 특화단지 조성

■ 기대효과

- 지역 특성에 맞는 명품 수산물 육성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친환경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충남지역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함

(2) 사업명: 지식·정보화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 수산업 육성

■ 세부사업내용

- 급변하는 수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충남 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부가가치의 기술력과 차별적인 경쟁력을 배양함
 - 수산연구소 활성화 추진
 - 해양수산 분야 R&D 역량 강화
 - 친환경 고밀도 새우(종묘)양식 지원
 - 유망업종 교육 강화 및 기술이전
 - 어촌후계 수산전문 인력 양성

■ 기대효과

- 연구능력 확립 및 R&D 강화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연구기관 및 지도기관을 통해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어업인의 자립능력이 강화됨
- 수산 전문 인력 및 어촌지도자의 발굴·지원을 통해 어촌과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

6. 살기 좋은 희망 마을만들기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농정의 방향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분권정책과 함께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의 내발적 지역발전, 상향식 농촌개발을 위한 ‘농어촌 마을만들기’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란 공동체(커뮤니티) 또는 이에 상응한 다양한 공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협력을 통하여 ‘삶터’, ‘공동체’, ‘사람’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미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마을만들기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림부(현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촌개발 등 미흡한 부문을 보강하기 위해 2004년 2월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목표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촌지역개발 지역농업육성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2004년 6월에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삶의 질 향상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4월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2005~2009) 기본계획(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등에 대한 통합적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그동안 농림부, 행자부, 복지부 등에서 분산되어 추진되었던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활력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농림부로 이관하여 통합개편하였으며, 최근에는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지역주도의 종합적·통합적 발전을 위하여 기초생활권정책과 포괄보조금사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마을만들기가 공공주도로 추진되었다는 점 3년 이내의 단기사업이 중심을 이루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 농어촌 마을만들기가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없이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는 점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총괄기획기능 및 전담부서의 부재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추진으로 주민간 갈등발생, 시·군단위의 마을만들기 모형 및 노력이 지속되거나 주변지역으로

의 확산 미흡 등에서 한계점이 지적된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마을만들기는 주민 주도가 아닌 공공주도로 추진되었다.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아젠다 설정과 사업화 및 집행과정 등에서 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며, 특히 왜 농어촌 마을만들기가 추진되어야 하는지 농어촌 주민 스스로의 사업추진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이 피동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무분별한 정부지원사업에 익숙한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업선정에 따른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이 부족하며, 사업내용이나 사업선정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이기주의 성향이 나타나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농어촌 마을만들기는 대부분 3년 이내의 단기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정권교체에 따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다수 사업은 1년 단위의 한시사업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3년 이내의 단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권이 교체될 경우, 수뇌부의 이해관계나 성향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변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농어촌 마을만들기는 사업기간이 한시적이며 사업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소규모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연속을 갖는 농어촌 마을만들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농어촌 마을만들기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없이 단위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관련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능동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독자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도 최근까지 농어업농어촌 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없이 대부분 중앙정부 국비사업에 의존하는 단위사업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넷째,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총괄기획기능 및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태이다.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는 농촌개발의 통합기획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종합적인 농촌개발정책을 수립하는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농업정책과 또는 농정과 등에서 농정총괄을 담당하나, 실제 하는 일은 각과에서 올리는 예산이나 사업을 주로 취합하는 일에 머물며 대부분이 농어업 부문에 치중되어 있으며 농어촌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총괄하는 역할

은 담당하는 부서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농어촌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담당부서가 분산되어 있고, 있더라도 농어촌개발의 종합적인 기획기능이 없이 단지 국비예산에 기초한 일부 농촌지역개발 관련 행정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추진으로 주민간 갈등발생 여지가 다분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은 대부분 상향식 개발을 표명하면서 추진위원회나 추진기획단 등과 같은 주민중심의 조직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마을만들기가 이들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즉, 이러한 조직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대변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일반주민과의 갈등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고, 특히 소득사업의 경우 영농법인의 구성이나 수익의 분배에 있어 일부 관여된 주민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시·군단위의 마을만들기 모형이나 노력이 지속되거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충청남도 몇몇 시·군에서 국비사업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주시의 5도2촌 주말도시, 금산군 농촌관광대학, 홍성군 특색있는마을가꾸기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홍동면·문당리 등은 마을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들이 마을만들기의 우수한 모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차원에서 벤치마킹하여 정책화되거나 지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타 시군으로 확산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시·군차원에서의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의 지원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가 추진될 경우 단계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역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 조성 등을 위한 충청남도의 내발적 농촌개발 모델로서 주민중심의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가 민선5기 충청남도의 주요 시책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모델 및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2) 기본 추진전략

(1) 사람 및 공동체 중심의 마을만들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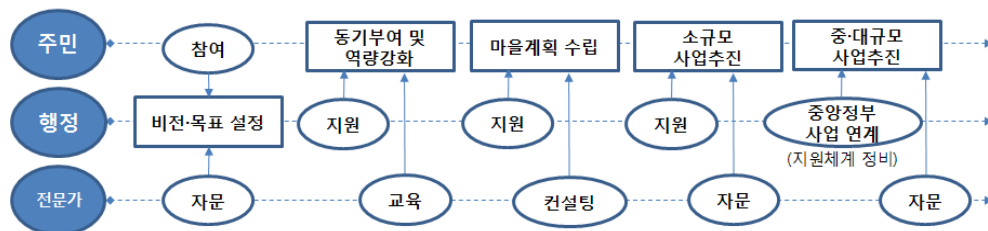
이제까지의 마을만들기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주기반’과 ‘생산기반’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마을만들기는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 ‘공동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영역적 측면에서의 ‘공간(환경)’, ‘사람(조직)’, ‘공동체(관계)’와 기능적 측면에서의 ‘정주’, ‘생산’, ‘여가’의 3×3의 9가지 구성요소를 보다 바람직한 모습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표 5-13> 마을만들기의 영역 및 기능

영역 기능	삶터 (공간)	사람 (조직)	공동체 (활동·교류)
정주	(삶터)정주기반의 정비 및 확충	인구유치 및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및 주민활동의 활성화
생산	(일터)생산기반 및 경제활동기반의 확충	생산인력의 확보, 경제활동 역량강화	생산활동 및 소득·경제활동의 활성화
여가	(쉼터)문화·여가기반 확충 및 경관·환경의 개선	문화·여가 수요층의 확대	문화·여가활동 및 경관·환경보전활동 활성화

(2) 주민 스스로의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에 의한 마을만들기 추진

주민들의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하여 스스로의 마을만들기 추진을 유도하고, 이를 행정가 전문가가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침체되어 있는 마을은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통해 새로운 마을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 마을만들기의 경험이 있는 마을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하여, 미래에 대해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그림 5-7> 마을만들기의 기본방향

(3) '정책화 전략'과 '마을추진전략'을 추진

마을만들기를 행정에서 정책화시키기 위한 '정책화 전략' 과 농어촌마을에서 실제 적용하기 위한 '마을추진전략' 을 구분하여 추진한다.

<표 5-14> 마을만들기의 추진전략

구분	정책화 전략	마을추진전략
1단계	① 추진준비단계 - 마을만들기 행정선언/필요성 공유 - 목표 및 미래상 설정 - 지역순회교육(홍보) -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 마을진단 프로그램 도입	① 주민 동기부여 및 유도단계 - 공공행정중심 & 소극적 주민참여 - 마을순회교육(홍보) - 학습모임(연구회) 구성 및 활동 - 리더중심 포럼 운영
↓		↓
2단계	② 기반조성단계 - 확산유도 및 행정기반 조정 - 센터개설 및 지원팀 운영 - 지원조례 제정 - 관련 주체간 협력방식 개발 -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지원예산 마련 / 모델사업 추진 - 공무원 교육 및 전문가 육성	② 주민기획단계 - 민간·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 점진적 주민참여 - 체계적인 주민조직 구성 및 활동 -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 마을발전계획 수립 - 마을만들기 구상 제안 - 소규모 자체사업 추진
↓		↓
3단계	③ 활성화단계 - 지원행정체계 구축 - 전담부서 설치 - 각종 지원기금 마련 - 전문가 파견 및 담당제 도입 - 컨설팅·활성화 프로그램 도입	③ 주민주도단계 - 민간단체·전문가·주민참여 & 주민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 마을개발 체계화(규약, 회계 등) - 네트워크모델 확산 - 주민참여 프로세스 강화 - 소·중·대규모 국비사업 연계 추진

(4) 마을 역량별 맞춤형 마을만들기 추진

마을의 역량별 유형구분에 의해 맞춤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 마을의 유형은 크게 ‘일반마을’과 ‘희망마을’로 구분하고, ‘희망마을’은 기존 사업추진 유·무 및 마을의 역량정도에 따라 다시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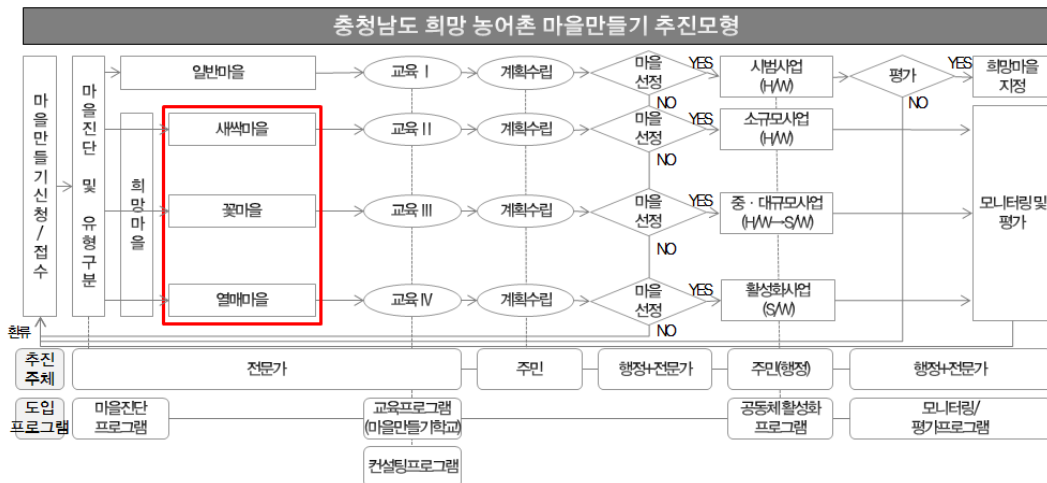
‘일반마을’은 기존에 사업추진 경험이 아주 없고 주민역량이 미비한 마을이 해당된다.

‘새싹마을’은 마을만들기를 통하여 ‘희망마을’로 지정됐거나, 혹은 이와 동일한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소규모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이 해당된다.

‘꽃마을’은 기존 마을만들기 관련 소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이거나, 혹은 이와 동일한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중·대규모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이 해당된다.

‘열매마을’은 기존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이거나, 혹은 이와 동일한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기 조성된 시설물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마을이 해당된다.

역량별 마을만들기 추진은 ① 마을만들기 신청/접수 → ② 마을진단 및 유형구분 → ③ 유형별 마을만들기 추진(주민교육 → 계획수립 → 사업대상마을 선정 → 사업추진) → ④ 모니터링 및 평가의 순서에 의해 추진한다.



<그림 5-8> 마을만들기 추진 모형

3) 민선 5기 실천과제

(1) 사업명 : 마을자원조사 및 마을진단·유형화

■ 세부사업내용

- 16개 시·군 4,544개의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자원조사 실시함
 - 마을개발 잠재자원이 될 수 있는 유·무형자원을 주민 스스로가 찾아내고, 마을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차원에서 마을자원조사 추진
- 마을자원조사 결과를 DB화하고 평가·진단하여,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의 유형을 구분함
- 각각의 유형구분에 의한 마을실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함

■ 기대효과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에게는 마을발전의 동기를 부여함
- 충청남도의 모든 마을을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충실성에 맞는 역량별 마을개발을 추진함

(2) 사업명 : 마을만들기 주민 동기부여 및 추진주체의 역량강화

■ 세부사업내용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 마을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홍보 및 시군순회 설명회를 개최함
- 마을만들기학교 개설 및 운영 등을 통한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민간중심의 마을만들기 Network 결성 및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함
- 기존 우수마을 리더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포럼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학습 및 향후 발전방향 토론 등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

■ 기대효과

- 마을만들기 홍보를 통한 동기부여로 시·군 및 마을주민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고, 추진주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기반을 마련함

(3) 사업명 : 마을만들기 모델사업의 추진

■ 세부사업내용

- ① 마을만들기 신청/접수 → ② 마을진단 및 유형구분 → ③ 유형별 마을만들기 추진(주민교육 → 계획수립 → 사업대상마을 선정 → 사업추진) → ④ 모니터링 및 평가의 순서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함
- 유형별 추진내용
 - 일반마을 : 주민동기부여 교육 및 시범사업계획 수립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희망마을’로 지정함
 - 새싹마을 : 소규모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수립후 소규모 H/W사업을 추진함
 - 꽃마을 : 중·대규모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수립후 소규모 H/W + S/W사업을 추진함
 - 열매마을 :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계획 수립후 S/W사업을 추진함

■ 기대효과

-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에 의한 역량별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차별화된 마을을 체계적으로 육성함

(4) 사업명 : 마을만들기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마련

■ 세부사업내용

-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함
 - 재원 : 단기적으로는 자체재원 및 국비재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금 및 펀드 마련 등에 의한 안정적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함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 마을만들기의 정의 및 공간적 범위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지원조직과 계획비용 및 집행예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
- 전담조직 및 중간조직의 구성
 -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및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

■ 기대효과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함

7. 농어촌 6차 산업화

1) 현황 및 문제점

농어촌 6차 산업화는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2차산업 및 3차산업 등까지 그 영역을 확대 농업의 종합산업화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충남발전연구원, 2011). 이러한 6차산업화 개념은 일본에서 1990년대 도입된 개념으로써, 기본적으로 농어촌자원의 융복화 및 다각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농어촌 6차 산업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지리적표시제, 신활력사업, 행정안전부의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기획재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정책적 측면은 최근 새롭게 도입된 포괄보조금제도에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이 별도의 사업군으로 설정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농어촌 6차 산업화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1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이관률, 2010).

한편 농어촌 6차 산업화와 관련한 대표적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추진된 사업으로는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충남의 향토산업 관련정책의 추진은 보면, 전국 139개의 11.5%를 차지하고 있는 16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3년간 30억 사업비 투자)하고 있으며, 전국 76개의 중 7.9%를 차지하는 6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추진(3년간 6억원 내외의 사업비 투자)하고 있다(이관률, 2010; 김현호, 2011).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화 현황을 살펴보면 <표 5-15>과 같다.

<표 5-15> 충남의 향토산업 및 지역연고산업 추진현황 1

관련 정책	시군	사업명	사업기간
향토 산업 육성 사업	청양군	구기자 산업육성사업	2009-2011
	당진군	초락도리 약쑥개발	2009-2011
	부여군	부여 굿뜨래밤 명품화사업	2010-2012
	서천군	한산 소곡주 명품화사업	2010-2012
	금산군	고품질 안전인삼 농식품 생산사업	2011-2013
	논산시	강경 발표젓갈산업 육성사업	2011-2013
	논산시	양촌 감와인 육성사업	2012-2014
	금산군	추부명품갯잎의 판매촉진전략을 위한 마케팅사업	2012-2014
	부여군	굿뜨래멜론 글로벌유통 활성화를 위한 신상품개발사업	2012-2014
	홍성군	광천 토굴새우젓 명품화 클러스터사업	2012-2014
	예산군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사업	2012-2014
	태안군	청정에너지 활용 태양초 고추산업화단지 조성사업	2012-2014
	천안시	병천순대 웰빙명품화 클러스터사업*	2013-2015
	공주시	공주알밤산업 고도화 전략*	2013-2015
	서산시	발표식품 어리굴젓 산업화사업*	2013-2015
	연기군	운주산 세종 슬로우푸드 향토산업 육성사업*	2013-2015
지역 연고 산업 육성 사업	서천군	한산모시 Global Business Brand 강화사업	2008-2011
	금산군	인삼약초바이오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2009-2012
	보령시	통합 브랜드를 통한 보령머드 산업 육성사업	2009-2012
	천안시	충남지역 재제조산업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사업	2010-2013
	청양군	청정 청양 그린웰리스 육성사업	2010-2013
	공주시	유구 Jacquard Biz-polis 사업	2010-2013

이외에도 향토자원 개발에 관련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해 주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충청남도, 2010; 김현호, 2011).

<표 5-16> 충남의 향토산업 및 지역연고산업 추진현황 2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 사업비	부 서	비 고
지역특화 발전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 인삼 헬스케어('05) - 논산 청정딸기·양촌곶감, 청양고추·구기자('06) - 강경 젓갈, 예산 황토사과, 서천 한산모시, 태안 종합에너지('07) - 서산 바이오·웰빙('08), 부여 양송이, 서천 한산 소곡주('09) 등 - 공주5도2촌알밤, 공주한민족교육('10) 	규제 특례	경 제 정책과	지경부
광역클러스 터활성화 (향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홍성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09~'11)) - 논산 젓갈, 금산 인삼('09~'11) - 논산 양촌 감, 금산 추부 깻잎, 부여 멜론, 홍성 토굴 새우젓, 예산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태안 태양초 고추('10~'12) 	3년간 사업단별 30억 이내 (국비15)	농 업 정책과	농식품 부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 전문경영인 지원, 유통전문조직 구축 -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개발 및 관리 -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전자상거래 - 친환경 종합지원센터, 통합물류센터, 홍보시설물 설치 등 	3년간 사업단별 25억 내외 (국비 50%)	농 업 정책과	농식품 부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 -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농어촌체험·관광 - 농수산물 제조·가공, 체험·전시시설 - 네트워크 구축·운영, 역량강화, 기술개발, 마케팅, 추진단 운영비 등 	광특회계 포괄보조 금이내 (국비 50%)	농 업 정책과	농식품 부

이처럼 농어촌 6차 산업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6차 산업화에 대한 성과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김현호외, 2011). 첫째, 6차 산업화에 대한 기초조사가 비교적 미흡한 실정이다. 시군 및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경쟁력과 시장성, 잠재력을 지닌 자원을 유형화할 뿐 아니라 사장 자원에 대한 복원 등을 토대로 자원의 분류 및 유형화 등이 부족하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관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둘째, 지역의 특화성과 전략성에 토대한 6차 산업화 육성 노력이 비교적 미흡하다. 단품

농특산품의 지명도에 기반을 둔 향토자원의 개발 상품화에 더해 시계열적, 횡단면적인 지역의 중주성 등을 분석하고 주민의 인식 및 수요, 전국의 인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부족한 편이다.

셋째, 사업추진의 분절성 단편성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일한 지역 특산품의 상품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사업비와 사업규모로서 향토자원의 상품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장선에서 지역 내외부의 관련 시책간의 연계성도 부족하다.

넷째, 낮은 향토자원의 상품화 수준과 지역의 산업과 연계성이 낮은 정도의 향토산업육성의 문제가 있다. 부여 밤푸렛 등 일부 산업화에 성공한 지역의 경우조차도 맹아적 단계로서 클러스터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다른 산업의 창출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후방 연계성도 부족하다. 일부 집적지의 경우도, 단순 집적지로 노동시장 미형성, 향토산업의 영세적 규모로 인해, 성장동력으로서의 자리매김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 미흡한 편이다.

다섯째, 6차 산업화를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과 제도적 장치의 구비가 미흡하다. 향토자원 개발 및 시군 및 시도 향토산업 육성의 설계에 해당하는 밑그림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시도 및 시군의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 간 연계 전략을 통한 광역화 등에 대한 계획이 없다. 관련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의 구축도 부족하며, 향토자원 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조직·제도·예산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향토자원 개발, 상품화를 통해 지역의 번영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경영사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플랜의 구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여섯째,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구상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6차 산업과 관련된 부서는 농수산물농업정책과 농촌자원과 식품산업 그리고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경제정책으로 3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농촌자원담당에서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식품산업담당에서는 향토자원문화디자인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정책담당에서는 향토자원개발 및 특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과 경제통상실이 이원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기본추진전략

충남도 6차 산업화의 기본추진전략을 몇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 있는 농어촌 자원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향토자원 발굴 경진대회의 개최와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6차산업화개발협의회 등 조직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6차 산업화 개발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각적인 농어촌자원의 개발육성을 위해서는 부문 간의 융복합화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 역사자원, 생활풍습 등의 소프트자원을 통한 축제, 이벤트, 관광 등이 기업화산업화 전략과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산물 위주의 농어촌자원 선정과 개발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농어촌자원의 개발을 통한 산업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6차 산업화는 깻잎, 감, 고추 등 농산품의 상품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대응한 6차산업화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 유형에 따라 향토자원 개발, 향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의 지원수요가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대개 차별적이다. 따라서 종합도시형과 농산어촌형은 기술특허지식과 네트워킹을, 그리고 산업도시형과 농공복합형은 기술특허지식과 R&D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

넷째, 충남도가 주관이 되어 다양한 유형의 농어촌자원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범위의 차원에서는 시군 자체적인 접근과 시군 협력적인 접근의 이원화가 필요하고, 개별 자치단체별 향토자원의 개발보다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용적 차원에서는 산업화에 한정하기 보다는 복합화·관광화 전략의 추진도 필요하다.

다섯째, 광역형 농어촌 자원의 개발 및 산업화의 경우 개별 지역 및 광역자치단체의 전략산업과 전후방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전체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 자원 개발을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지원하거나 경쟁력 있는 농어촌 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농특산 식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촌 자원의 상품화를 식품산업클러스터로 구조를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6차 산업화를 클러스터적 관점에서 볼 때, 구성요소의 확충, 기업화단계로 구조고도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6차산업화로 전환 촉진하고 6

차 산업화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충남의 농어촌 자원 개발 및 산업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 전체의 농어촌 자원의 발굴, 개발, 산업화 방안을 포함하여 시군별 전략의 개발 뿐 아니라 이들을 전문화 연계화시키는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6차 산업화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

여덟째, 충남의 농어촌 자원 개발 및 산업화를 제대로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기반의 마련 및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 통합적 추진체계를 포함한 농어촌 자원 개발 및 산업화 관련 조직의 구성, 6차 산업화 조례 및 6차 산업화 지원 및 추진체계의 구축, 지역대학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향토산업 관련학과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 민선 5기 실천과제

(1) 향토자원 및 향토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세부사업내용

- 향토자원의 발굴 및 DB화
- 발굴된 향토자원의 시장성 분석
- 향토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기대효과

- 향토자원의 시장성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향토산업의 육성 토대 마련
- 향토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

■ 정책제언

- 향토산업의 기반인 향토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함

(2) 향토산업 비즈니스인큐베이터의 설치

■ 세부사업내용

- 향토산업 관련 창업 및 마케팅 지원

- 향토산업 관련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통합지원
- 향토산업의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대한 자문(중기청의 지원프로그램 우선 적용)

■ 기대효과

- 향토산업과 관련한 창업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향토산업의 기업애로사항 지원과 지적재산권 자문으로 향토산업의 기업화 촉진

(3) 향토산업육성조례 제정 및 향토산업통합위원회의 운영

■ 세부사업내용

- 향토산업육성조례의 제정
- 향토산업 제도규제의 발굴 및 개선
- 기존 향토산업 관련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향토산업통합위원회 운영

■ 기대효과

-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던 향토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 향토산업 관련정책의 통합적 추진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파급성 제고

(4) 향토산업 산업화 기반 확충 및 인증제 도입

■ 세부사업내용

- 향토산업 전용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의 전용단지화 추진
- 향토산업 기업대상 및 인증제 도입
- 향토산업육성기금의 설립 및 운영

■ 기대효과

-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과 향토산업 인증제도의 도입

(5) 향토산업 공동학습 네트워크 및 교육훈련 강화

■ 세부사업내용

- 향토산업 네트워크 및 공동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역특화산업기획포럼사업 활용)
- 향토산업 종사인력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지역대학 및 고등학교에 향토산업 관련 학과 설치 유도

■ 기대효과

○ 향토산업 관련분야 공동학습 네트워크 구축으로 혁신환경 조성 및 정보교류 활성화

○ 향토산업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과 신규 인력양성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확보

8. 농어촌 사회서비스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농어촌 사회서비스는 지나치게 물리적 시설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이 크지 않다. 이에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농촌 개발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유지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정책적 투자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 관리 추진을 운영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주거·보건·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항목에서 필수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정책 목표도 시설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어촌 서비스기준 제도는 모든 지역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수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며 국가적 최소 수준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충청남도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와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에 관한 분석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시군의 서비스 공급실태(8개 부문의 37개 항목)를 살펴보면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이 전국 시군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고, 8개 서비스 부문 중 교통부문과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군 지역에서 교통부문과 보건의료부문의 서비스 공급지수가 낮게 나타나지만 충청남도의 군 지역의 경우 이 부문의 서비스 공급지수가 오히려 전국 시군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교육부문과 사회복지부문의 서비스 공급지수가 타 부문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부문, 보건의료부문, 정보통신부문의 서비스 공급지수가 전국 시군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충청남도는 16개 시군의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은 전국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충청남도는 전반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특

7) 송미령 외(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와 김광선 외(2010),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김광선(2011),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제3회 워크숍」 자료 참고

히 군 지역에서는 주거, 사회복지, 정보통신부문에 공급 확대 정책을, 도농복합시에서는 교육, 사회복지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거나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17> 기초생활권 시·군의 공공서비스 부문별 공급지수(2005년 기준)

서비스 부문	기초생활권 시·군			충청남도		
	군	도농통합시	일반시	군	도농복합시	16개 시·군
주거	4,388	5,461	6,195	4,558	5,296	4,881
교통	4,750	5,024	6,243	5,086	5,069	5,078
교육	4,895	4,730	5,932	4,852	4,718	4,793
보건의료	4,769	5,073	5,660	5,059	5,122	5,087
사회복지	4,620	4,841	6,668	4,655	4,756	4,699
응급	4,672	4,822	6,525	4,850	4,811	4,833
문화여가	4,952	5,009	5,148	4,877	4,874	4,876
정보통신	4,510	5,063	6,592	4,618	5,102	4,829
종합지수	4,695	5,003	6,120	4,819	4,969	4,885

주: 전체 시·군의 평균 서비스공급지수 값은 5.000임

자료: 김광선, 2011,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제3회 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 p.48

16개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와 계룡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서비스 공급지수가 전국 시군 평균 이하이며, 교육, 사회복지, 응급부문의 경우 모든 시군이 공공서비스 공급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상황이다.

<표 5-18>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공공서비스 부문별 공급지수(2005년 기준)

시·군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종합지수
천안시	5,914	5,287	4,739	5,379	5,031	5,110	5,035	5,470	5,246
공주시	5,067	4,702	4,740	5,408	4,717	4,645	5,183	4,792	4,907
보령시	5,101	4,927	4,777	5,103	4,630	4,912	5,018	4,683	4,894
아산시	5,169	4,431	4,630	4,998	4,883	4,822	4,598	5,047	4,822
서산시	4,955	4,136	4,621	4,759	4,628	4,813	4,601	4,855	4,671
논산시	4,621	5,438	4,851	5,530	4,824	4,895	5,016	4,787	4,995
계룡시	6,244	6,565	4,669	4,675	4,579	4,480	4,671	6,078	5,245
금산군	4,333	5,425	4,833	5,023	4,619	4,696	4,827	4,525	4,785
연기군	4,935	5,110	4,760	4,860	4,851	4,766	4,641	4,976	4,862
부여군	4,521	4,945	4,912	5,340	4,650	4,755	4,618	4,429	4,771
서천군	4,100	5,129	5,016	5,524	4,806	5,101	5,039	4,596	4,914
청양군	4,032	4,895	4,973	5,003	4,553	4,958	4,812	4,436	4,708
홍성군	4,849	5,169	4,911	5,348	4,718	4,914	5,350	4,715	4,997
예산군	4,848	5,083	4,784	4,803	4,565	4,954	4,699	4,763	4,812
태안군	4,799	4,734	4,726	4,766	4,536	4,759	4,850	4,462	4,704
당진군	4,608	5,282	4,750	4,867	4,600	4,748	5,056	4,658	4,821

자료: 김광선, 2011,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제3회 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 p.48

충청남도 시군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앞에서 분석한 공공서비스 공급지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교통부문과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하고 전국 농어촌 시군의 이행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가장 기초적 생활 인프라인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이 낮게 나타났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기준을 달성하는 곳은 계룡시 뿐이며, 청양군의 경우 7.4%에 불과하고, ‘상수도 보급률 71% 이상’ 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곳도 천안시와 계룡시 두 지역뿐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교육부문, 사회복지부문, 문화여가부문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아 충청남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9> 농어촌 시·군의 서비스기준 항목별 이행실태

부분	기준항목	세부 기준항목	이행실태	
			농어촌	충남
주거	주거 가능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수비율	76.0%	83.9%
	신재생에너지 보일러보급	해당 여부	97.9%	100%
	공동시설 프로그램	운영비/프로그램 지원	60.9%	—
	안전한 마실 물	면지역 상수도보급률	45.6%	32.3%
	오폐수 처리	하수도보급률	57.1%	53.4%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대중교통 이용 여건	81.7%	90.8%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41.6%	—
	인도 설치	읍·면소재지 접근로 인도 설치	17.4%	—
교육	고등학교	우수/기숙형고교	85.7%	81.3%
	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59.8%	—
	평생교육	읍·면별 거점시설 1개 이상	19.9%	19.1%
보건 의료	1차 진료	중요과목 의사 진료	99.3%	100%
			99.3%	100%
			99.3%	100%
			32.1%	50.0%
	순회방문	순회방문	50.5%	—
	의약품 구입	읍·면 단위 의약품 구입 가능	96.4%	100%
사회 복지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92.9%	87.5%
	아동	지역아동정보센터	42.6%	41.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8.6%	93.8%
		방문서비스 여부	71.4%	62.5%
응급	도난 방지	마을별 방범용CCTV	34.9%	—
문화 여가	독서	공공 및 작은도서관	51.5%	42.4%
	문화시설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98.6%	93.8%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19.4%	12.5%

주: 이행실태 칼럼 중 음영으로 처리된 항목(%)은 농어촌 시·군의 평균과 충남지역 16개 시·군의 평균을 의미
 자료: 김광선, 2011,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제3회 워크숍, 충남발전연구원, p.49-50

2) 기본 추진전략

(1)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방향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이행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기에 충청남도 시군 차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법적 근거 마련,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행 촉진 방안, 이행 실태 점검·평가와 통계기반 구축방안, 농어촌 서비스 기준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관련 제도 및 정책과의 연계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남 정책과제 모색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촉진을 위해 충청남도는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성과목표 및 지표 재설정,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의 주기적 점검과 컨설팅 체계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파트너십 구성,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 발굴, 농어촌지역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양한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3) 민선 5기 실천과제

(1) 사업명 : 충남형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운영과 제도 구축 및 정책수단 발굴

■ 세부사업내용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준 마련

- 지자체 별 농어촌 서비스 기반 실태 조사
- 지자체 별 농어촌 서비스 기준 마련

○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전문적 인력 및 기구(조직) 필요
- 이행 실태의 점검·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이행 실태가 부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제시 컨설팅

○ 파트너십 구성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기업부문, 제3섹터, 주민·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 주체간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방안 마련

○ 정책 이행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및 정책수단 발굴

-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추진체계 구축
-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협약 구축
- 예산확보 방안 및 타 정책과의 연계 운영 방안 모색
- 이행 실태 점검·평가와 통계기반 구축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이행 추진을 위한 관련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보급
- 이행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유지 도모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어촌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제고

(2) 사업명 :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운용

■ 세부사업내용

○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운용(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의거)

- 충청남도 시책사업 중 도시와 농어촌에 미치는 정책 분석
-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설정
- 농어촌 특성에 대한 평가

: 서비스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와 소수의 정책 수혜자, 농어촌 사업체의 영세성과 분산, 농어촌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인적자원, 사회자본과 민간 부문 인적자원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 DB 구축

- 농어촌 정책영향평가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현재 기획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농어촌 정책

영향에 대한 평가

: 정책 영향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도시- 농어촌간 차별적인 정책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 서비스 정책의 불리한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도모
- 정책 분석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 차별적인 정책 개선 효과

9.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1) 현황 및 문제점

충청남도의 도농교류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책을 지원하는 형태와 충남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추진시책을 지원하는 형태는 농업정책과의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의 어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산림녹지과의 산촌생태마을(산림청), 관광산업과의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해양수산부), 농업기술원의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등이 대표적이며, 충남도 자체적인 시책은 관광산업과의 템플스테이, 종교체험관광, 녹색관광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농어촌체험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업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한정하여 살펴보면 2010년까지 총 155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도농교류사업은 유사사업의 중복 유사한 테마와 프로그램 양산, 인적자원 및 방문객 수용여건 부족, 방문객의 특정마을 편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는지 그 실효성 및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사업추진 도중에 사업주체간의 갈등, 주민 참여의 결여, 행정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농협의 팜스테이사업은 농사체험과 농산 가공체험, 생태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농촌에서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고 농협이 홍보에 적극 힘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농협과 마을의 소수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과 상품화 능력이 부족하며, 내방객 확보도 농협의 알선에 의존하고 있는 등 아직 본 궤도에 오르기에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⁸⁾ 특히 별도의 투자자원이 없어 마을정비 등 관광인프라의 형성이 부족한 점, 마을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숙박 등에 한정되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점 등은 가장 취약점으로 평가된다.⁹⁾

8) 송두범외,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10. p. 70.

9) 오내원의, 농가계층별 소득증대방안 농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116.

한편, 침체되고 쇠퇴한 농어업·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충남도 및 시군의 자체적인 시책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농협, 시민단체 등 민간주도의 운동(캠페인)은 부정기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등이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범 도민차원의 충남 농어업·농어촌살리기 운동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개가 요구된다

2) 기본 추진전략

첫째, 기존의 농촌체험마을의 하드적 시설 보강은 물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체험마을간의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농어업·농어촌 문제는 농촌지역주민들만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도시주민을 포함 전 도민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증가하고 있는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회귀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 충남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인구를 유도해야 한다.

3) 민선 5기 실천과제

(1) 귀농·귀촌 수요예측 및 통계 정비

■ 세부사업내용

○ 귀농 희망 도시민의 수요예측 및 관련통계 정비

■ 기대효과

○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충남 귀농·귀촌유입 촉진 기대

○ 귀농·귀촌인구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가능

(2) 귀농·귀촌 설명회 및 투어 실시

■ 세부사업내용

○ 수도권 및 대도시를 방문 충남 귀농여건을 설명하는 귀농설명회 개최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대상으로 충남의 농업·농촌체험을 하는 귀농투어 실시

■ 기대효과

○ 충남지역 귀농·귀촌인구 유입을 위한 홍보 강화 기대

- 기 운영 중인 민간 귀농지원센터의 활성화 기대

(3) 귀농 현장 애로지원단 운영

■ 세부사업내용

- 귀농·귀촌선배,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연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전화상담, 농가 방문 등을 통한 귀농·귀촌인 초기정착단계 지원

■ 기대효과

- 현장애로지원단 활동 체계화로 귀농정착 유도

(4) 충남 귀농인대회 개최

■ 세부사업내용

- 귀농·귀촌 성공사례 발표, 귀농인 생산 농산물 전시·판매, 도시민 귀농 홍보 등
- 귀농인 상호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기대효과

- 귀농·귀촌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상호간 연계 강화 기대

(5)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캠페인

■ 세부사업내용

- 식료자급률 향상 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
- 1일 1식 이상 한국식 밥상(전통한식 밥상) 차리기 운동 전개
-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의 달 선정·운영(매년 10월)

■ 기대효과

- 지역농산물의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대 유도
- 충남도민에게 지역농산물 및 식료자급률의 중요성 인식 확대

(6)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민 운동

■ 세부사업내용

- 충남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민간)

○ 도내 문화·예술 단체(조직) 정기적 농어촌 마을 방문 공연 지원

○ 초·중학생 산촌 유학(농산어촌 장기 숙박체험) 지원

■ 기대효과

○ 도시민의 삶의 가치 향상 및 농산어촌에 새로운 활력 제공

○ 도시민들에게 농어업·농어촌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대

10. 지역리더 양성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농촌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Top-down approach)에서 지역주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Bottom-up approach)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전환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실제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당초의 의도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분명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정책의 취지를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지역(마을)단위의 인적역량 부족 및 지역리더의 부재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적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및 리더십 육성과정의 참여율이 타시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¹⁰⁾이며, 시군별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역량강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농업경영, 농업기술 등 전문농업인육성 측면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개발 및 마을경영에 필요한 통합적 지역리더 육성에는 아직 정책적, 재정적 지원책이 미미한 상태라 볼 수 있다.

현행의 충남 농촌지역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농정이나 교육 담당 공무원이 종전의 전문농업인 교육이나 농업기술교육과 달리 농촌의 지역리더 교육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 대상자인 농업인·농촌주민들이 교육 피로증에 걸려 있다는 점이다. 즉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리더 양성 관련 기존사업은 농업인전문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대학과정 4개의 사업이 있으나, 대부분이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현장 실습중심의 실용교육으로 앞에서 문제제기 했던 주민주도형 농촌개발 및 지역경영에 필요한 지역리더 양성 사업은 전무한 상태이다.

하지만, 4개의 기존사업은 미래의 충남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 농업인 양성이라 측면에서 볼 때 지속시켜 나갈 사업이라 판단되며, 현장에서의 수요와 평가도 높은 것으로 나타

10) 유학열외(2009) 연구결과 참조

났다. 단, 농업인 전문교육사업의 경우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교양 과목(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경우 교육생의 책임 있는 교육 이수를 위해 교육비 자부담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충청남도의 실정과 현실을 고려하면서 지역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내발적발전의 주체로서 농촌지역리더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역시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 기본 추진전략

첫째, 지역리더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지역역량강화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자기결정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용 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개인적인 리더가 아니라 각 주체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지역리더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충청남도 독자적인 농촌지역리더 육성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지만 일회성, 이론적 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주민의 경험과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많다. 충청남도 농촌지역주민의 역량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독자적 지역리더 육성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3) 민선 5기 실천과제

(1) 농촌 지역리더 양성

■ 세부사업 내용

- 충남농촌의 인적역량수준을 고려한 지역리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농촌 지역리더 양성 교육 실시
 - 세부계획 20명 × 14개 시·군 × 3년
 - 교육내용: 지역개발, 인문교양, 경영 마케팅 등

■ 기대효과

- 현실에 맞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맞춤형 리더 육성 기대

참고: 「현장체험형·계획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각종 농촌마을개발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마을에 교육생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파악, 분석하는 ‘현장체험형 학습프로그램’과 예비계획서 작성, 기본계획 수립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 학습하는 ‘계획참여형 학습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천 학습(action-learning)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유학열외(2009) 『충남 농촌의 인적역량강화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p.63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 인용

(2) 지역리더 교육이수자 풀(pool) 구축

■ 세부사업 내용

- 충남농업기술원 학사관리 시스템 개선
- 지역리더교육,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대학, 귀농대학 등 모든 교육이수자 정보 구축
 - 구축내용: 기본인적사항, 사회활동, 사회적 지위, 타교육이수 등

■ 기대효과

- 지역리더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의 절감
- 교육참가자들의 중복 수강으로 인한 교육거부감 해소

(3) 농어촌 체험마을 순회교육

■ 세부사업 내용

- 마을 주민 마인드 향성을 위한 교육 실시, 총225개 마을
- 마을진단 및 활성화, 운영주체 리더십, 관광마인드, 서비스향상 등

■ 기대효과

- 도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을의 질적 수준 향상

참고: 「순회방문문제해결형프로그램」

충청남도 내 농촌계획·개발 분야의 전문가, 관련 부서(실과) 공무원 및 도 내 우수마을의 리더(이장, 추진위원장, 사무장 등)로 인력풀(pool)을 구성, 정기적으로 농촌지역(2~3개 면단위가 바람직하다고 봄)에 직접 찾아가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 중심의 학습프로그램이다. 주민 간의 갈등 해소, 지역자원의 발굴 및 활용, 마을 운영상의 문제점 등 각종 현안과제들을 여러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문제해결형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과는 달리 참가인원 및 대상마을의 제한을 두지 않아도 돼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다는 점과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마을의 리더로부터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단, 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력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할 수 있는 도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

자료: 유학열 외(2009) 『충남 농촌의 인적역량강화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p.63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 인용

참고 문헌

- 김정호 외,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외, 2010, 농업·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호, 2011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 개발의 과제”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속 워크숍(제5회)』 충남발전연구원
- 김현호·이관률, 2011 “충남 향토산업의 육성방안” 『열린충남』 제55호 충남발전연구원
- 박진도, 2011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교우사
- 산림청, 2010 『2009 임산물생산조사』
- 산림청, 2010 『임업통계연보』
- 송두범외, 2010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송미령외,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오내원외, 2001 『농가계층별 소득증대방안 농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학열외, 2010 『충남 농촌의 인적역량강화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이관률, 2010, “향토산업의 선정과정과 선정기준의 영향력 분석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3호 지방행정연구원
- 이병오, 2008, 「축산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252(발표논문).
- 장철수, 2011 “산림·임업 부문 중장기 발전방향 및 과제”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속 워크숍(제3회)』 충남발전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 2011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속 워크숍」 자료집(1회~6회)
- 충남발전연구원, 2011 「충남 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 자료집

충남발전연구원, 2011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개소기념 세미나 자료집』

충청남도, 2009 「2020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발전 종합계획」

충청남도, 2010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충청남도, 2010 「민선 5기 충남비전」

충청남도, 2010 통계연보

충청남도, 2010 충남 농정주요통계

충청남도, 2011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

충청남도, 2010, 「충남의 농어가인구 및 농어업인력 전망과 정책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연구과제

황명철, 2010 「일본의 농업·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2010 NHERI 리포트 제132호

保母武彦, 1996 『内發的發展論と日本の農山村』 岩波書店

鶴見和子, 1996 『内發的發展論』 東京大學出版社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유학열 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1-05 · 민선5기 충남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 연구

글쓴이 · 유학열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1년 12월 31일 / 발행 · 2011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201(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75-5 03350

<http://www.cdi.re.kr>

©2011.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